

2023

통권 제35호



+입법정보

세계중의회인식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16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성공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 유치



6 새로운 대한민국 상기종은 **가시**
입법평가제 우수사례 지방의회 경진대회 우수상



14 제78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회



15 의정모니터링
성과보고회



28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를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일시: 2022. 11. 25.(금)
국회 이전 위한 규칙 제정 및 세종연수원설치
촉구 결의안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56



32
5분
자유발언



59
입법정보



4 제79회 정례회 본회의 처리 안건 및 성과



17 광역시도회의회장단 대통령 간담회

2023년도(계묘년) 세종시의회 의장 신년사

“강인한 뒷발로 장애물을 뛰어넘는 토끼처럼
코로나와 경제 위기 등 난국 헤치고 나가는 한 해 되길”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입니다.

계묘년(癸卯年) 새해는 ‘검은 토끼의 해’입니다. 더 멀리 뛰기 위해 자세를 낮춘 토끼의 모습처럼 코로나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제 위기 등의 난국을 빠르게 헤쳐 나가 진정한 일상 회복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길 응원합니다.

특히 2023년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원년’으로 우뚝 서길 기대합니다.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세종시의 눈부신 도약과 정주 여건 개선 및 문화·복지 수요 충족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선언에만 그치지 않은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들도 더욱 활발해져야 합니다. 세종시민들을 포함한 충청권 지역민들은 물론, 많은 국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회 이전 규모를 국회 규칙으로 정하는 초당적인 논의가 새해에는 활발하게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아울러 국가 균형 발전과 국정 비효율 해소라는 국회 이전 취지에 부합하는 국회 전체 이전 방안과 세종 의정연수원 설치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고민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한 2027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에 관한 구상과 별도로 현재 정부세종청사에 마련된 대통령 임시 집무공간의 이용 빈도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무회의 및 중앙지방협력회의 세종 개최 약속 이행이 그 첫걸음입니다.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인 세종시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면 정치·행정 기능의 단계적 이양이 절실합니다. 세종시의회를 비롯해 중앙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법무부·여성가족부 및 감사원 세종 이전, 수도권 소재 14개 정부위원회의 이전 등에 관한 논의가 새해에는 전향적인 방향으로 검토되길 기대합니다.

2022년은 ‘10·29 참사’로 많은 국민들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낳은 해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 함께 ‘안전을 지킨다’는 각오로 불미스러운 사건·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하겠습니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시민의 안전 및 보건 환경과 관련된 시 정책들을 면밀히 점검하고 본예산에 반영된 각종 안전 및 보건 사업들이 적시에 제 효과를 내고 있는지도 철저히 살피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관심과 성원을 밑거름 삼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깊이 있게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민의의 전당입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본분을 잊지 않고 계묘년 새해에는 시민들께서 흡족해할 수 있는 의정 성과들을 내는 데 더욱 주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시민들의 믿음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실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계묘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 병 현



새롭게 시작하는 10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



- 4 **특별 기획**
 - 제79회 정례회 본회의 처리 안건 및 성과
 - 입법평가제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 8 **특별 인터뷰**
 -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인터뷰
 - : 상병헌 의장 / 박란희 제1부의장 / 김학서 제2부의장
- 14 **의정뉴스**
 -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회 성과보고회 등
- 21 **의원소식**
- 26 **결의안**

CONTENTS



32 5분 자유발언

42 상임 특별위원회 활동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복지위원회
- 산업건설위원회
- 교육안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53 주요안건 처리현황

56 마인드맵으로 본 조례

58 포토뉴스

59 입법정보

- 생활법령정보
- 주요입법동향
- 최근 시행 법령
-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74 의원 발언함

80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82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시상식 개최

- 소감문

90 의회 운영 홍보채널 소개 & 회기 일정

91 독자 투고 안내 & 구독 신청





세종시의회 제79회 정례회 폐회 2022 회기 일정 마침표

12월 15일 4차 본회의서 총 3조원 규모 내년 본예산안 등 6건 처리

박란하·김현옥·김재형·김효숙·김광운 의원 5분 자유발언…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폐회 직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 개최…총 33명에게 감사패 및 표창장 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을 처리하고 올해 공식 회기 일정을 종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란하·김현옥·김재형·김효숙·김광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 대안을 제시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 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지었다.

상병헌 의장은 한 해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

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회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을 갖춘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강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폐회 직후 의정발전 유공 시상식을 개최하고 한 해 의정 발전에 기여한 지역 주민 28명과 관계기관 공무원 5명에게 각각 감사패와 표창장을 수여했다.



의정발전 유공 표창 수상자 명단

▣ 의정발전 유공 시민[감사패 / 28개]

구 분	연 번	구 분	읍·면·동	포상대상
1조	1	감사패	조치원읍 갑	이정희
	2	감사패	조치원읍 을	박성규
	3	감사패	금남면	김병태
	4	감사패	부강면	정만수
	5	감사패	대평동	김선기
	6	감사패	연기면	신동익
	7	감사패	연동면	박정희
	8	감사패	연서면	이진복
	9	감사패	해밀동	손영숙
2조	10	감사패	전의면	김경자
	11	감사패	전동면	김복희
	12	감사패	소정면	이규남
	13	감사패	한솔동	이숙자
	14	감사패	장군면	최현숙
	15	감사패	도담동	이기준
	16	감사패	어진동	정성현
	17	감사패	아름동	이연아
	18	감사패	종촌동	박재희
3조	19	감사패	고운동 갑	권해도
	20	감사패	고운동 을	강병훈
	21	감사패	보람동	김서연
	22	감사패	소담동	배병국
	23	감사패	반곡, 집현, 합강	정다워
	24	감사패	새롬동	김홍순
	25	감사패	나성동	김형수
	26	감사패	다정동	신세철
	27	감사패	고운동_비례	안상현
	28	감사패	다정동_비례	이정희

▣ 의정발전 유공 기관 표창[표창장 / 5개]

연 번	구 분	소 속	부 서	포상대상
1	표창장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최성은
2	표창장	세종시청	정책기획관	신현민
3	표창장	세종교육청	교육협력과	박천규
4	표창장	세종경찰서	경비교통과	서성봉
5	표창장	의회사무처	의사입법담당관	권은경



세종시의회,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작년 우수상에 이어 시민 중심 조례 입법평가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수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가 11월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등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의정활동 중 주민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9건에 대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이번 우수사례로 선정된 세종시의회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청·교육청 조례까지로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내실을 기한 점,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설명회를 열어 의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연장에서 세종시의회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은 “조례 입법평가위원으로서 직접 우수 성과를 소개하는 발표까지 맡아 영광이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로 자체 입법 역량을 강화한 제4대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몹시 기대된다”고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작년 대회의 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또다시 큰 영광을 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우리 의회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신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주민 권익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지난 2019년부터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등에 대한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어왔다. 올해는 주민이 지방의회의 활동과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사례를 추천하는 방식의 ‘주민추천제’를 처음 도입했다.

활발한 입법 실적 기반으로 조례 운영 실효성 평가 공감대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세종시의회는 활발한 입법 실적을 기반으로 조례 운영의 실효성 평가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다.

실제로 세종시의회는 지난 4월 28일 발표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국 광역 지방의회 입법실적 분석’에서 조사 기간인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1월 31일까지 연 평균 6.5건에 달하는 조례 발의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행정 및 복지 수요 증가 등에 발맞춰 입법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던 결과다.

입법 건수의 양적인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지방의회 위상과 역할이 한층 강화됨에 따라 질적인 입법평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세종시민들의 삶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의회와 시민사회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입법평가’ 추진이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2021년 9월 24일 조례 입법평가 조례 제정 이후 올해 4월 말부터 8월까지 법제전문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게 위탁해 입법평가를 실시했다. 시민단체와 변호사, 법률 전문가 등 자치입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가 입법평가위원회로 참여했으며 입법 평가 결과를 세종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에 통보해 실질적인 변화를 모색했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입법평가 결과 의원 설명회’를 열어 자치입법권자의 관심을 제고하고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다.

세종시의회 충청권 광역의회 중 의정활동 활성화 1위

지난 1월 9일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처리된 의안 중 세종시의회 의원 1인당 발의 건수가 충청권 광역의회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회는 제4대 의회 출범 후 6개월간 조례안 40건을 발의했으며 1인당 조례 평균 발의 건수는 2건으로 충청권 타 광역의회 평균을 웃돌았다. 이뿐만 아니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수에서도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세종시의회 5분 자유발언 횟수는 총 34회로 의원 1명당 평균 1.7회를 기록했다. 이 수치 역시 충청권 타 광역의회 평균을 상회했다. 세종시의회가 충청권 광역의회 중 의정활동 활성화 지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비결은 제4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와 역량 향상은 물론, 기초 자치단체 없는 단층제 구조와 도시 개발 단계에 따른 다양한 입법 및 정책 요구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일 잘하는 의회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제4대 의회 전반기 의장 취임 일성으로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열심히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은 그동안 의회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통과 화합의 의정을 펼쳐왔다. 상 의장을 만나 신년 의정 구상을 들어봤다.

Q. 계묘년 새해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의 본연의 역할은 거대한 양 집행기관인 시청과 교육청의 감시입니다. 양 집행기관을 충실히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회 구성원의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새해는 다양한 시도를 통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 '시민 소통으로 공감하는 의회상'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앞장서서 주민들을 대신해 일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세종시 발전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성과를 보여준다면 주민들의 신뢰와 지지가 자연스럽게 뒤따를 것으로 믿습니다.

Q. 4대 의회 의정방향은 무엇인가?

올해의 사자성어를 함께 살고 함께 번영해 가자는 의미의 '공존공영(共存共榮)'으로 정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많이 쓰이는 공존공영을 올해의 사자성어로 선정한 이유는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자는 취지입니다. 시민들의 민의를 수렴하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023년은 공존공영의 정신으로 시민들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공존공영을 넓혀 생각하면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공존의 가치에 가까워질 수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번영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Q.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힘써온 걸로 알고 있다. 주로 어떤 부분에 방점을 뒀나?

지난해 10월 20일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독립기관에 걸맞은 역할과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만장일치로 채택됐을 정도로 전국 광역의회의 기대치와 공감대는 이미 충분한 상황입니다. 국회 운영과 역할, 권한 등을 규정한 국회법과 같이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준거법인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을 이끌어냈으며, 의장협의회 정책사업비를 활용해 전국 시도의회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용역을 실시, 지난 12월 27

일 의장협의회에서 그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Q.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 인력 확충 등 의회 역할이 강화된다. 어떤 변화상을 만들어갈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올해 2월까지 정책지원관을 추가로 6명 채용할 예정입니다. 시청과 교육청을 견제·감시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의회 조직에 비해 거대한 조직으로 구성된 세종시청과 교육청을 상대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역량을 갖추고 견제와 감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양한 의정 연수 및 직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추진, 직원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여 나날이 발전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Q. 세종시 여러 현안 중 의회가 눈여겨보는 것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의 해결책을 찾을 것인가?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내실있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유치가 절실합니다. 성장 동력이 될 많은 기업을 유치해서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상권 침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변화의 방법들을 모색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들이 시정에 적용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싶습니다. 지난 10월 20일에 세종시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완화됐지만 실제 정책 체감도에 대해서는 앞으로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추가적으로 규제 완화가 필요한 부분을 찾고 지역 축제 및 문화예술, 주요 상권 상인회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4대 세종시의회의 출범으로 시작된 2022년 하반기 의정 활동이 시민들에게 좋은 기억과 행복감을 선사했길 바랍니다. 올해도 의정활동으로 세종시와 세종시민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우리 의회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2023년에도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정 성과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로지 민생 오직 시민만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 세종시의회 박란희 제1부의장 -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맞아 만난 세종시의회 박란희 제1부의장은 생활 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겠다는 각오로 가득 차 있었다. “새해에도 시민 편에 서서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박란희 부의장의 신년 포부는 남달랐다.



Q. 계묘년 새해 각오부터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세종시의 새로운 10년을 열어 가는 제4대 세종시의회 전반기 제1부의장으로 중책을 맡겨 주셔서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시 의회는 여소야대라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가진 아주 특별한 환경이라는 점에서 여당과의 협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번 원 구성을 통해 느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의회 내 협치를 위해 여·야를 아우르는 새로운 소통문화를 조성하고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 부의장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에 대해 시민들이 갖는 기대와 우려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성심껏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Q. 새해를 맞아 어떤 목표로 의정활동에 임할 계획인지?

지난해에는 세종시의회 전 의원들과 6개월간 활동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올해에도 기대와 바람이 현실이 되는 희망의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세종시민들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세종시가 발전을 거듭해 갈 수 있도록 예리하면서도 착실하고 끈기 있다는 의미를 지닌 호시우행(虎視牛行)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시민들과 더 가까운 접점에서 만나 지역 현안을 논의하고 지혜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열린 소통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Q.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 어떤 구상을 갖고 있나?

우리 지역 상권 활성화 문제는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계속되

온 우리 모두가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상권을 제외하면 우리 일상에서 빈 상가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시가 처한 상권 침체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보입니다. 이전에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는 시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 논의해 나가면서 정책적으로 시도한 결과물을 놓고 더 나은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그동안 정책적으로 추진돼 온 상권 활성화 관련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보고, 미진하거나 미비한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킬 수 있는 상권 회복 방안을 심도 있게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4대 의회부터 20명으로 확대된 의원 정수를 십분 활용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일 잘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39만 세종시민들의 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의회, 소통하는 의회'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특히 여성 부의장으로서 우리 시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드리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시민 체감도 높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세종시 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며 시의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응원과 격려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도농상생발전은 미래 세종의 신성장 동력”

- 세종시의회 김학서 제2부위원장 -



세종시의회 김학서 부의장은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동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순조롭게 세종시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읍면 지역의 발전 속도가 더뎠다. 도농 상생 발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학서 부의장이 기대하는 세종시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세종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새해를 맞아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제4대 세종시의회의 의원이자 부의장으로 활동할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우리 시의회가 처한 여소야대 상황에서 의장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은 의원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의정활동에 몰입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책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어떠한 내홍이나 잡음 없이 의회가 순조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생각입니다. 지난 6개월간 동료 의원들은 물론, 저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성원해주신 시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부응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진력해 나가겠습니다.

Q. 세종시의회의 부의장으로서 새해를 맞아 어떤 각오로 의정활동을 펼칠 계획인지?

제4대 의회 의원들의 평균 연령은 42.8세로 제3대 의회에 비해 6세 이상 젊어졌습니다. 최연소 의원과 최고령 의원의 나이 차이가 크게 줄어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인 세종시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젊은 도시에 걸맞은 선도적인 정책적 시도는 물론이고, 현장 소통과 공감 의정을 펼치는 데도 젊은 의회의 강점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로 구성된 제4대 의원의 나이 분포에서 알 수 있듯, 한쪽에 치우치지 말고 변화와 안정 사이에서 적절히 균형을 맞춰 달라는 민심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세종의 내일을 위해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스마트도시의 비전에 부합하는 첨단 산업 육성 기업 유치, 교육 기반 및 관광문화 사업 기반 조성 등을 위해 앞선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Q. 인구 80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종시의 읍면 지역 발전이 동반되어야 하는데, 그에 대한 입장과 계획은 무엇인지요?

읍면 지역의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젊은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세종시에 중견기업 유치를 통해 사원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도록 세종시 차원에서 지원과 요청 방안 등을 수립해야 합니다. 실제로 전의와 전동, 소정면 중 한 대기업의 사원 아파트가 있는 소정면의 경우 학생 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젊은 인구 유입으로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연구용역을 맡겨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모델링 방안을 만들어서 도농 균형발전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Q. 세종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의장단의 일원으로서 당리당락보다는 우리 민생이나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합치된 말이나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세종시민들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책임감과 함께 사익과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공익을 지향하는 균형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쳐 시민이 바라는 ‘의회다운 의회, 성숙한 의회, 품격과 격조 있는 의회’를 만드는데 부의장직에 걸맞은 역할과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NEWS

세종시의 밝은 내일을 만드는
의정 뉴스를 전합니다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링 결과보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1월 4일 오후 의회 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제78회 정례회 모니터링 결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는 개원 이후 처음으로 의정모니터단을 통해 지난 제78회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정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의정모니터단으로 위촉된 37명은 개인별로 현장 방청 또는 온라인 중계 시청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후 개인별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모니터링 결과, 전체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송곳 질의,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초선 의원들이 대다수인데도 시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에 충실했다는 총평을 내렸다.

일부 의원에게 질의가 편중되는 경향이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집행부 답변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고압적인 어투 등은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상병헌 의장은 “올해 시범적으로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내년에는 이를 본예산까지 확대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모니터링 기법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인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의정모니터단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이 견제와 균형의 의회민주주의 실현과 시민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2022년 의정모니터링 성과보고회 개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2월 20일 ‘의정모니터 2022년도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제3기 의정모니터단의 한 해 활동 내용과 성과를 공유한 데 이어 2023년도 의정모니터단의 운영 방향 등을 논의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이날 보고회에서 그간 다양한 의견 제출 등 적극적인 의정모니터링 참여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제3기 의정모니터단 6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달했다.

또한 2023년도 의정모니터단 운영 방향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와 의정모니터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교수를 초청해 의정모니터 우수 사례와 모니터링 기법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상병헌 의장은 “올해 세종시의회는 모니터단 인원을 의원 정수의 2배인 40명으로 확대하고, 참여 연령을 16세로 하향하는 등 의정모니터 활성화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 결산과 행정사무감사를 대상으로 의정모니터링을 시범 실시했는데 내년에는 사전 교육을 통해 모니터링 역량을 제고하고, 대상을 본예산까지 확대하는 등 의정모니터단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는 지난해 2월 공개 모집과 선발 심사를 거쳐 제3기 의정모니터단 40명을 선발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별 분과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상가 공실 문제 해소를 위한 ‘해제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10월 2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상가 허용 용도 규제가 한층 완화된다.

지난해 9월 30일 공동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상가 공실 완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조건부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BRT 역세권 3층 이상 상가에는 당초 학원과 병원 및 업무시설만 허용했지만,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이·미용원, 목욕장을 비롯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볼링장과 당구장 등 체육시설도 추가로 허용된다.

또한 당초 소매점, 음식점, 음악당으로만 제한됐던 금강변 수변상가에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이·미용원, 세탁소, 지역자치센터 및 파출소·소방서 등 공공업무시설을 포함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독서실과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등으로 상가 허용 용도를 완화했다.

특히 공동위는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숙박시설 입지 관련 종합 검토 필요’를 권고사항으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상가 공급 비율을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더욱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판단된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계기로 숙박시설 입지와 추가적인 허용 용도 완화 방안에 관한 논의 등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가 상가 공실 문제 해소와 나아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 총청권 메가시티 가능성 확인한 역사로 기록될 것”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1월 15일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에 대해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총청권 메가시티의 가능성을 확인한 역사적인 성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상 의장은 총청권 시도지사들을 비롯해 총청권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리허설 및 전략회의에 두 차례 참석하며 종합적인 득표 분석과 재정 확보 문제, 부담금 관련 협의 등에 힘을 보탰다.

또한 대내외적인 업무 협력과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지가 대회 유치에 큰 몫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외적으로 조용만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겸 IOC 위원 등이 재정 지원 등 대회 유치와 운영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명해 범정부 차원의 스포츠 외교 지원과 노력이 빛을 발했다. 정태봉 세종시 체육회장 등 총청권 체육 행정조직과 연대한 준비와 대처 역시 국제 대회 유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상 의장은 “2027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총청권 공동 유치는 총청권 지역민들의 열렬한 지지를 기반으로 공식 유치 활동에 돌입한 지 2년 4개월 만에 거둔 값진 결실”이라면서 “앞으로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행정수도 세종시를 알리는 동시에 총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 연대한 성공적인 대회 유치, 나아가 대한민국 스포츠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 시도위원장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이 10월 20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히 건의안에는 현재 국회에 3건의 지방의회법 제정 법률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히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국 지방의회 차원의 요구가 담겼다.

한편 이날 의장협의회 전반기 임원 선임 결과,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의장협의회 전반기 정책위원장을 맡게 됐다.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 만장일치 가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이 11월 24일 경남 진주 동방관광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회의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자체감사기구 지방의회 산하 이속(移屬) 건의안’은 감사기구의 장을 비롯한 감사 담당자를 행정사무 감사·조사권을 가진 지방의회 소속으로 전환하여 독립성과 공정성이 보장되는 자체 감사체제를 구축하자는 취지다.

상병헌 의장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지방 감사기구를 지방의회에 귀속시키거나 주민직선에 의한 감사관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 채택을 계기로 지방의회와 자체감사기구의 실질적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통령 초청 전국 광역의회 임원진 오찬간담회 참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은 12월 22일 대통령실 본관 2층 누리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초청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임원진 오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진복 정무수석, 서승우 자치행정비서관 등이 자리했다.

상병헌 의장은 간담회에서 김현기 회장(서울시의회 의장) 등 의장협의회 임원진과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확대 및 예산편성권·자치입법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의 실효성 강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을 건의했다.

상병헌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께 KTX세종역 설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하고,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추진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큰 기대감을 전달했다”며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지방의회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자치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병헌 의장 등 대한민국의장협의회 임원진 행안부 차관과 간담회 가저

대한민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김현기 회장을 비롯한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이 11월 2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의장협의회 임원진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보장 ▲정책지원관 제도 실효성 강화 ▲지방의회기본법 제정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확대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현실화 ▲지방시대위원회 구성에 지방의회 참여 보장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을 건의하고 행안부 한창섭 차관에게 제안서를 전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현기 회장 등 임원진은 “지방시대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의회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보장하고 근거법인 ‘지방의회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행안부 한창섭 차관은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제안 내용을 관련 부처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지방의회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가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상병헌 의장)는 12월 8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그동안 상병헌 의장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 등 많은 제도적 변화가 있었지만,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강조해왔다.

이번 연구용역은 이러한 상병헌 의장의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강한 의지로 의장협의회에서 배정하는 정책사업비 예산을 활용해 추진하였으며 지방자치학회(박노수 교수)가 연구용역을 맡아서 진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기준인건비 및 예산 편성 요구권 도입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 현실화 ▲의정 연수시설 확대 설치 ▲자체 감사기구의 지방의회 소속 전환 ▲인사청문회 및 교섭단체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세종시법에 따른 세종시지원위원회의 의장 참여 등 집행기관과의

불균형 해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상병헌 의장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발굴된 제도 개선 사항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물론 다른 시·도 의장들과 함께 공유하고 의장협의회 등을 통해 안건으로 공론화하는 등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국 광역 시·도의장단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 채택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병헌 의장이 제출한 ‘지방의회 의장 정책보좌인력제 도입 건의안’이 1월 26일 울산 머큐어앰버서더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이하 의장협의회) 제1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상병헌 의장은 지난해 9월 의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지방의회 의장의 정책보좌관 등 전문임기제 임용 근거 마련의 필요성’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은 지난해 의장협의회 의정사업비로 실시한 ‘지방분권 및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결과 중 30개 개선방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보람초 의회 견학〉



〈해밀초 찾아가는 의회교실〉

세종시의회, 10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0월 25일부터 31일까지 미르초와 도담초등학교 학생 88명을 대상으로 4회에 걸쳐 청소년의회 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발언 기회를 얻어 의회 의사진행 과정을 쉽고 친숙하게 이해하도록 지원했으며, 학생들이 제안한 건의안을 두고 전자투표 체험도 진행했다.

참가 학생들은 2분 자유발언 및 교육행정 질문, 건의안 제안을 통해 세종시 현안에 대한 독창적인 의견과 참신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미르초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안신일 의원은 “꿈을 갖고 미래로 나아가길 바라며 훌륭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길 응원하겠다”고 격려했다.

또한 도담초 청소년 의회교실에 함께한 이순열 의원은 “제 79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질문에 오늘 학생들의 소중한 발언을 참고하고 싶다”며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춘 아주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 동안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의회교실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윤지성 의원이 해밀초 나라·마루·라운반 학생들과 만났다.

윤 의원은 학생들에게 “수학과 영어 등 교과목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교실에 있는 친구들과 대화하며 타

인에 대해 공감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11월 4일 세종시의회에 견학을 온 보람초등학교 학생들을 맞이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이번 만남과 소통하는 시간을 통해 어린이의 시각에서 보는 시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었고, 미래를 이끌 주역인 어린이들이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과 민주 시민의식에 대해 생각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11월 11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세종대성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본회의 방청 중인 대성고 학생들〉



도시 숲속 다목적 운동시설 오가남뜰공원 '숲속 체육관' 개관

2017년 주민숙원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계절과 날씨에 관계없이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오가남뜰 숲속 체육관'이 12월 20일 개관했다.

오가남뜰 숲속 체육관(아름동 804)은 지상 1층 859.86㎡(260.57평) 규모로 배드민턴장 4면과 농구장 1곳, 농구장 1곳을 갖추고 있다. 특히 실내 체육활동에 필요한 채와 공 등 공유 운동용품을 비치해 주민 이용도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2019년 3월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지원사업 공모에 오가남뜰 다목적 체육시설 건립 사업이 선정되면서 국비 지원 10억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시비 24억 7천만원을 포함해 총 34억 7천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하면서 주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복합 체육공간 조성이 본격화됐다.

상병헌 의장은 “오가남뜰 숲속 체육관을 건립하기까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은 물론 국비 공모 사업 준비 등을 위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가 큰 발판이 됐다”면서 “앞으로 전천후 사계절 이용 가능한 오가남뜰 숲속 체육관이 주민들을 위한 건강 증진 및 화합교류의 장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설계비 우선 반영

세종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2월 15일 열린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세종시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 2억 5천만원을 우선 반영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는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사업'에 25억원에 달하는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철저한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세종시의회는 향후 해당 사업의 조성 계획을 보완하여 세종시의 내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담아 제출할 경우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해 생활체육 저변 확대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 사업비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종시의회는 이 사업이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체육활동에 대한 시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세종시청 관계 부서 및 체육회 관계자 등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다가가는 정책으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 활성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12월 1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세종시 환경녹지국에 전략적으로 먼저 다가가는 정책을 통한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주문했다.

미세먼지 방지시설 지원사업의 저조한 집행률로 이월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대상 업체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지도·점검을 비롯해 관계 중앙부처에 개선 요구 사항을 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이 위원장은 환경부 훈령인 환경오염 물질배출시설에 관한 점검 규정에 따라 점검 및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규정 제17조에는 사업장 지도 및 점검 감시 활동에 민간인 참여 등의 조항이 있다”며 “감시단 활동이 이뤄진다는 고지만으로도 배출을 많이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관련된 규정도 있는 만큼 적극적인 해석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제 첫 번째 5분 발언 주제가 기후 위기에 관한 것이었는데 지금은 선언보다 실천이 필요한 시대인 만큼 탄소중립지원센터의 활동들이 효과적인 실천 방안들로 이어져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방안 마련”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순열 위원장은 11월 3일 간담회에서 공동주택 관련 민원과 분쟁 등을 해소하기 위한 전문 상담 인력 확충과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스템 마련 등 합리적인 공동주택 관리 체계 구축을 목표로 관계기관 간 공감대 형성 및 협력을 당부했다.

이순열 위원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남일우 회장 등 4명), 세종시 공동주택생활지원센터장 등과 만나 공동주택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세종시의 경우 공동주택 거주 인구 비율이 85%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만큼 우리 시 주거 특성을 감안해 각종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분쟁에 선제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확충과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라면서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개선방안 마련과 개선 노력을 주문했다.

한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회는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분쟁 해소를 위한 전문 상담 인력 보강과 체계적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표준화된 운영 플랫폼 구축, 크린넷 유지보수비용 지원 등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공동주택 관리 과정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시의회와 세종시청, 주택관리사협회 등 관계기관이 협력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세종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김영현 의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현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12월 8일 전동면 세종시 유기동물 보호센터와 조치원 유기동물 공공분양 시행업소를 방문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유기동물 보호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현장 관계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러면서 민간 네트워크를 다각적으로 활용한 유기동물 보호기간 증대 방안과 전담 수행기관에 대한 필요성을 토대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박란희 부의장과 김영현 의원은 “보다 나은 환경에서 유기동물의 체계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하고 유기동물 입양을 활성화해 생명 존중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는 관내 보호센터의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입양 후 6개월 내 사용한 동물 진료와 등록, 미용비용의 60% 등 최대 15만원의 입양지원금 등 적극적인 입양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

유인호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은 12월 14일 의회청사 대회의실에서 세종시교육청 및 보람동 학교 교육기관 관계자와 ‘2023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교육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을 토대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석자들은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한 교육기자재 교체와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보강, 현장 체험 학습 시 전세버스 주정차를 위한 드롭존(Drop-zone) 설치, 학생들의 무분별한 키보드 사용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우선 집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수요 조사를 통해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힘쓰겠다”며 “학교 측에서도 이러한 수요 조사 시 필요한 사업 내역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인호 의회운영위원장은 “논의된 사항과 관련하여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은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개선하도록 하겠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보람동 등 관내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세종시 “행사 안전 관리 조례 없다”

11월 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는 행사 및 축제 등의 안전 문제와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효숙 의원은 “현재 대전 및 광주, 제주도 등 대다수의 타 지자체에서는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 있다”며 “세종시의 경우 아직 관련 조례가 없는 만큼 시급히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근 세종시에서 참가자만 1,600여명에 달했던 태권도 관련 행사가 열렸던 만큼 다수가 운집하는 행사는 옥외뿐 아니라 실내에서도 대규모로 열릴 수 있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현재 옥외 행사 안전 관리에 대한 조례는 전라남도와 전라북도, 제주도, 청주, 천안, 울산, 광주뿐 아니라 대전시 동구·서구·대덕구, 경기도 구리·군포 등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총 68곳에 제정돼있는 것으로 김 의원은 파악했다.



세종시의회 유인호·김현미 의원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 위기 해소의 중요한 요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운영위원장(보람동, 더불어민주당)과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5일부터 16일까지 양일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략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토론자로 나선 유인호 운영위원장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주민 자치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등을 계획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지역의 주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것이 지방 분권과 국가균형발전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자로 나선 김현미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법, 제도, 문화 등 모든 양식은 과거 형성됐던 체제의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법안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면 좋은 법도 있지만, 자치분권을 완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법적 요소들이 아직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읍면동 중심의 주민자치 등 자치분권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협력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인다면 완전한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방분권의 핵심인 풀뿌리 민주주의가 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야에도 아픈 아이 마음 놓고 병원 갈 수 있도록

세종 내 아동·청소년 인구가 늘고 있지만 밤늦게 이용 가능한 아동·청소년 병의원의 수가 적어 공공지원을 통해 심야 시간에도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2월 12일 세종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세종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발의를 준비하기 위해 지역 학부모 및 의료기관 관계자 등을 만나 의견을 수렴해왔다.

김효숙 의원은 “세종시학부모연합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임원진 등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현재 소아 청소년에 대한 야간 의료공백 해소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이는 세종에서 자녀를 키우는 모든 학부모의 공통된 고민이자 꼭 풀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세종시는 출산율 1위 도시인 데다 아동친화도시로 아동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3%에 육박하지만 의료 환경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김효숙 의원은 “특히 5세 미만의 영유아는 고열이나 급성질환 등으로 발병이 잦기 때문에 야간에 마음 놓고 찾을 수 있는 어린이병원이 꼭 필요하다”며 “22시 이후 세종 지역의 소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적어도 관내 한두 곳의 아동병원이 평일은 물론 주말 모두 24시까지 연장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전문 의료인력의 야간 근무에 대한 비용 부담과 흑시 모를 적자에 대한 우려로 심야 시간대 병원 연장 운영에 대부분 난색을 표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나서서 야간 운영시간에 따른 인건비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밤에 고열에 시달리는 아이를 안고 인근 대전이나 청주로 달려가야 하는 부모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라며 “세종 지역 아이들이 심야에 아플 때 멀리 병원을 찾아 헤매지 않도록 공공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첫걸음을 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와 광주시, 인천시 중구 등에서 관련 조례가 제정돼 지역별로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이 운영 중이다.



세종시의회 안신일 예결위원장, 공공시설 복합단지 현장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1월 4일 세종시청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장군면 공공시설 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현장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안신일 위원장은 사업 예정지 현황을 파악하고 세종시 관계부서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당부했다.



**세종시의회 이소희 의원,
세종학생회연합회와 교육 발전방안 모색**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이소희 위원장(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20일 세종 교육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세종학생회연합회(한울) 회장단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송유정 학생회연합회 회장을 비롯해 이연관 학생회연합회 부회장, 김희성 소담중 회장, 정서윤 다정고 회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세종시 학생들이 바라본 세종 교육의 현주소와 학교생활의 고충 및 제안 사항을 청취하고 실질적인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장단은 세종시 학교 교육과 사교육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며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교육 환경 개선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학생들을 위한 정책 홍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소통 확대 및 교육복지와 관련된 학생 수요를 반영한 정책 발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은 “정책 효과의 극대화는 실수요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됐을 때 가능하다”며 “세종시 학생들을 위한 정책이 전시성 행정에 그치지 않게 그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후 관련 부서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건의사항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특정감사 실시**

세종시교육청이 당초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계획했던 세종마을학교 특혜 선정 관련 특정 감사 기간을 사안의 복잡성으로 3주 더 연장해 12월 16일까지 5주간 실시한다.

지난 9월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로 이뤄지는 이번 감사는 세종시교육청이 세종마을학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게 특혜를 준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실시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9월 세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소희 교육안전위원장의 지적으로 밝혀졌다.

세종마을학교 공모 신청 당시 특정 단체가 A단체 명의로 A단체의 공익활동 실적과 예산으로 심사를 받은 후, 자격 요건에서 A단체의 성격이 문제가 되자 A단체에서 B단체로 명의를 변경했다. 대표자 이외 고유번호, 실적과 예산 등 A단체와는 전혀 다른 단체였지만 세종시교육청은 두 단체를 동일한 단체로 보고 세종마을학교 사업자로 선정했다. 당시 세종마을학교 공모에 참가한 총 36개 단체 중 6개 단체가 탈락했다.

세종마을학교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으로 비영리단체가 마을학교로 선정되면 4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감사 중점사항은 △마을학교 선정 및 집행 절차의 적정성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특정 단체의 자격 적격성 여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지방보조금 반납 및 정산 실태 △세종시청이나 교육청 타 사업과의 중복성 검토 등이다.

세종시의회,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 등 전 의원 공동 발의로 의지 표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1월 11일에 열린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현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을 통해 "사법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을 뿐"이라면서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세종시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에 육박해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세종 이전을 완료한 데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확정하는 등 사법 수요 증가 및 행정수도 대응에 필요한 사법 기능의 보완이 절실했다.

이에 따라 결의안에는 세종시에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을 설치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를 분산시키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개선은 물론,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핵심 요구가 담겼다.

특히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한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행정·재정적 지원 여건과 기대 효과 모두 충분히 갖춰져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현미 의원은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시급히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결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국회의장, 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민의 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의당 대표,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국회사무처장, 대한민국시도회의장협의회장,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등에 발송했다.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국가 균형발전의 실현을 위해 국회, 대법원, 정부가 조속히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세종시는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을 앞두고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

도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구급증으로 사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되어 있어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시급하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이 확정되는 등 행정수도 세종의 불가역적인 상황에서 부족한 사법기능의 보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세종에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이 설치되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그동안 이러한 당위성을 기반으로 법원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작년 9월에는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 법원, 정부 등에 이송했지만 아직 상황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를 위해 꼭 통과되어야 할 법원설치법과 행정소송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심사조차 안 되고 있다.

2021년 기준 세종시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의 사건 접수 건수는 140만 4,000건으로 전국 지방법원 평균인 97만 9,000건보다 42만 5,000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에 접수된 행정소송 건수도 2012년 782건에서 1,323건으로 70% 가까이 급증했다.

세종에 지방법원이 설치되면 대전지방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사법 수요가 분산되고 세종시민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며 행정법원이 설치되면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소송 대응 편의도 제고될 것이다.

또한 현재 세종시 반곡동 일원에 8만 489㎡ 규모의 법원·검찰청 부지가 확보돼 있고 법원 설치를 위해 행정도시 건설 특별회계 예산의 활용도 가능한 만큼 법원 설치를 위한 여건과 효과 모두 이미 충분하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이며 이는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도록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재차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회는 지체 없이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대법원은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 보장과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와 관계기관은 정치·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해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에 적극 협력하라.

2022. 11. 1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세종시의회, 국회 이전 위한 규칙 제정 및 세종 의정연수원 설치 촉구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대표 발의로 20명 의원 전원 만장일치 건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의장 상병헌)는 11월 25일에 열린 제79회 회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장의 대표 발의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국회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 국회 규칙 조속히 제정 ▲향후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한 건립 규모 확정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국회와 지방의회까지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연수시설 건립 등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건의안을 통해 "국회 이전 범위와 건립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국회 규칙에 담길 이전 범위를 최대한 확대해서 향후 국회 전체 이전까지 감안한 규모로 건립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건의안에서 국회와 지방의회를 아우를 수 있는 의정 전문 연수시설을 세종의사당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는 목적을 냈다.

건의안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의안 심사 및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 과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장), 국회 의장, 더불어민주당 대표·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회 각 정당 대표, 국회 운영위원장, 국회 사무총장, 행정안전부 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전국 지방의회 등에 발송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문

1.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해 건립 규모를 확정하고, 국회 상임위 등의 이전범위를 최대화하여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할 것과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업비를 '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가 주도로 건설 중인 도시로, 현재 47개의 중앙행정기관과 16개 국책 연구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7년까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 완성을 앞두고 있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은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합의에 의해 추진하는 것으로, 예정 부지면적이 631,000㎡(191,212평)로 여의도 국회의 약 2배에 달하고, 총사업비도 1조 4천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지난해 9월 「국회법」이 개정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어 이전범위 결정 등을 위한 국회규칙 제정을 앞두고 11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등의 일부 지원기관을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회 이전범위와 건립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를 좌우할 역사적 사안으로, 국회 전체이전이 아닌 일부 이전만을 고려한 규모로 건립하는 것은 막대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도 입법부의 기능 분산에 따른 서울과 세종의 정치·행정 이원화로 미래세대에 또 다른 심각한 비효율을 안겨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국회 일부 이전만을 고려한 세종의사당 건립은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으로, 국회 세종의사당이 대한민국의 랜드마크로서 민의의 전당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국회 전체 이전을 감안해 건립 규모를 확정할 것을 건의한다. 또한, 국회 상임위원회 등의 이전범위를 최대화하여 국회규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부지매입 등을 위한 사업비를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영할 것을 건의한다.

2.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에 교육시설과 숙박시설(생활관)을 포함한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전체에 대한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설치·운영할 것을 건의한다.

지난 1991년 민선 지방의회와 1995년 민선 자치단체장 출범 이후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주민의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갈등 해결 등을 위해 지방의회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자 독립기관으로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의정 역량이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분권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 인력도 없이 초선이 대부분으로, 지방议회의 의안 심사 및 집행기관 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축적된 노하우와 전문성을 공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맞춤형 연수 과정이 확대·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으로 지방议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지방의회 직원들의 의정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단기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문 교육시설이 필요하다. 국회의정연수원은 1995년부터 '지방의회 전문연수과정'을 운영하여 27년간 지방의회의원 9,216명과 지방의회 직원 14,186명 등 총 23,402명의 수료자를 배출한 의회전문 연수기관이다.

하지만, 국회의정연수원의 연수 과정 참여에 대한 열기가 높아 접수 시작 몇 분만에 마감될 정도로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지만, 교육과정이나 공간이 턱없이 부족해 충분한 교육 인원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국 243개(광역17, 기초226) 지방议회의 수시·정기적인 연수나 교육이 필요한 인원을 개략적으로 추정해보아도 지방의원 3,860명(기초 포함)과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6,551명* 등 1만명을 상회하고 있다. * 광역의회 2,152명, 기초의회 4,399명 / '21. 12월말 기준 조직통계편람(행정안전부)

국회는 삼권분립에 따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국회라는 그 공간 자체만으로도 살아 숨 쉬는 상징적인 교육의 현장이 되며, 27년 이상 축적된 노하우와 입법기관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의원과 직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연수를 위해 다양한 교육과정과 연수시설을 전폭적으로 확대 설치해야 한다. 이에, 국회 세종의사당 부지를 활용해 다양한 교육공간과 교육생 숙박시설(생활관)을 포함한 의정 연수시설을 건립하여,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까지 아우르는 대한민국 입법기관 전체에 대한 의정 연수시설로 확대 설치·운영 할 것을 건의한다.

2022. 11. 2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세종시의회, 박란희 의원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채택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 규정 개정 촉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은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공동 발의한 결의안에서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법제화를 촉구했다.

실제로 세종시의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은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21개 이전 공공기관의 신규 채용 인원 총 344명 중 지역인재 의무 채용 대상은 27명에 불과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 채용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현행 혁신도시법 시행령에서는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 조항

을 두고 있다. 이 예외 조항을 적용하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돼 채용 인원 수가 적어도 채용 비율은 충족하는 통계의 오류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이에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국회와 정부에 ▲현재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를 아우른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세종시의회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국토교통부 장관, 교육부 장관 등에 이송했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추진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기본구상이 발표된 2003년 이후 2019년까지 총 153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완료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도 국책연구기관 16개 등 총 25개의 공공기관이 이전되었다.

이에 따른 인구 증가와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지역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비단 지역 청년들의 취업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지역 불균형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수도권 과밀에 따른 주거부족, 교통혼잡 등 부작용을 완화하고 교육과 소득 격차 등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법률로 단단하게 규정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되던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는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인원 중 적용대상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무채용 기준을 맞춰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세종시의 경우, 2021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세종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21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총 33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이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이 채용되었을 뿐이다.

334명의 신규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채용은 2.4%에 불과했으며,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19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통계의 차이 또는 착시 현상은 혁신도시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에 근거하고 있다. 혁신도시법에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시행령에서 여섯 가지에 달하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①분야별 채용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 ②경력직 ③석사학위 이상 연구직 ④지역본부·지사에서 별도 채용 또는 지역본부·지사에서 5년 이상 근무 조건 채용 ⑤공공기관이 공고한 합격 하한선 미달 ⑥지역인재 지원자의 비율이 의무채용 비율에 못 미칠 때이다. 이런 조항에 해당하는 전형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 환산 때 제외된다. 문제는 지난해 이런 예외 조항에 해당하여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되는 전형을 통한 채용이 세종시 해당 신규채용 총 인원의 92%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예외 규정은 법 제도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국가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제화할 것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하나, 정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 혹은 축소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2. 12. 1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김동빈 의원
(부강·금남면·대평동,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불합리한 농업진흥지역 과감히 규제 풀어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동빈 의원(부강·금남·대평,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제 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조사·발굴해 과감히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농업 외에 다른 용도로 토지를 활용할 수 없어 재산권 행사와 읍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이 따른다는 게 김동빈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농업진흥지역 규제 개선 방안으로 ▲우량농지로 보전 가치가 없거나 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지역 등을 조사·발굴 ▲예산을 투입해 전문기관에 용역 조사 의뢰 ▲인력과 시간을 고려한 구역별 연차적 조사를 제시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민의 입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공공기록물 수용률 93%, 5년 내 포화... 세종시 기록원 설치 촉구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세종시 역사 보존을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제안했다.

유 의원은 “세종시의 경우 시청 지하 1층 기록관에서 출범 이후 현재까지 생산된 9만 3천여 건의 비전자 기록물을 비롯한 모든 지방기록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수용률이 93%에 육박해 5년 이내에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공공기록물 관리 개선 방안으로 ▲세종시 기록원 설치를 위한 단계적 절차 이행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한 민간기록물의 체계적인 수집 및 관리 ▲마을기록문화관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거론됐다.

유 의원은 “이번 회기 중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세종기록원 설치 등 실행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마을기록문화관 역시 제대로 운영해서 전국 최초로 제정된 마을기록문화관 관련 조례의 특색과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가정 내 폐의약품 적극 수거를 위한 개선방안 제언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공동주택 단지 내 수거함 설치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폐의약품 수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의약품 처리 방법 조사 결과를 근거로 약국과 보건소에 수거되는 비율은 8%에 불과한 반면, 쓰레기통과 하수구에 버리는 비율은 55.2%로 상당량이 소각 처리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주요 원인으로 폐의약품 분리 처리 필요성과 폐의약품 수거 장소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의 부족과 함께 폐의약품 수거 장소의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이 폐의약품 배출에 번거로움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폐의약품 배출 선호도가 높은 공동주택 단지 내에 수거함 설치 ▲읍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수거함 설치 ▲분리배출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거함 시인성 개선을 제시했다. 끝으로 “학생들이 바라본 사회적 문제에 공감해 주기 바람직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당부를 전했다.



여미전 의원
(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각종 축제와 행사에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여미전 의원(비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지역축제·행사 및 시설 등에 대한 지역사회 전반의 안전 체계 점검 및 안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시민 안전대책 수립방안으로는 당장 계획된 관내 전체 축제와 행사에 대한 재점검을 통한 철저한 안전관리뿐 아니라 예상 인원 규모 모니터링,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 매뉴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 의원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물론 지역축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와 현장점검까지 이뤄진 세종축제에서조차 총 33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시는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의 책임을 다했다는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안전사고 재발 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해 달라”고 지적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사고 예방 대안과 관련해서는 “법적 사각지대에 있는 주최자 없는 행사도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며 모든 행사 진행 시 비상구와 탈출구 확보를 기본으로 하고, 도시교통데이터센터 구축 및 활용을 통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는 안전관리 조례가 시급히 제정되어야 한다”고 거론했다.



김충식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독립 공간 없는 세종문화원 시설·인력 보강 시급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충식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1월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출범 10년 차 세종시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이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조직 확대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날 발언에 따르면 세종문화원은 1962년 ‘조치원문화원’으로 시작해 세종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알리며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60년에 달하는 역사와 지방문화원의 중요성에 비해 세종문화원의 시설이나 조직이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독립된 공간 없이 세종문화원과 시민회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거론했다. 김 의원은 세종문화원의 발전 방안으로 현재 4명으로 구성된 세종문화원의 조직 확대를 비롯해 시설의 현대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제시하며 많은 시민들이 찾는 문화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세종대왕님의 가장 큰 업적은 애민정신을 근간으로 한 우리 민족의 문화 창달”이라면서 “세종문화원이 그 이름에 걸맞은 세종문화원으로 재탄생 하길 간절히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침체된 상권 활성화 위해 천변 옥외영업 허용 필요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국민의힘)은 11월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권 활성화를 위한 천변 옥외영업 허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자체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려는 경우, 공통시설기준에도 불구하고 지자체가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를 근거로 세종시가 의지만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을지로 노가리 호프골목, 상봉동 먹자골목 등을 조성해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을 달성했다”며 “미국 뉴욕과 프랑스 파리, 캐나다 토론토에서도 오래 전부터 공공 소유 공간에서의 옥외영업을 허용해왔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적인 옥외영업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고 공공성을 구현하기 위해 옥외영업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공공 재정으로 환수해 도시 환경 예산으로 활용하는 등 허용 위치와 운영시간, 도로 점용료 부과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현미 의원
(소담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세종시 민간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언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미 의원(소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민간 위탁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세종시의 경우 현재 사회복지와 공공시설 운영·관리 등 187개 사업을 민간에 위탁 중이며, 이에 따른 예산 규모만 498억원에 달한다.

도시재생센터 특정 감사를 통해 감독기관인 세종시의 승인 없이 자체 운영 규정안으로 센터를 운영한 점과 채용 기준 미준수 등이 드러났으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종촌동 종합복지센터의 인사 규정 미준수와 부적절한 운영비 사용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민간 위탁 개선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기관 자문을 통한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마련 및 결과 공개 ▲재계약을 위한 시의회 동의 이전 관리감독 점검 결과 등 제출 심의자료 보완 ▲입찰 공고 시 합리적인 수준의 민간 위탁 사업비 책정을 유도하기 위한 기준 제시를 언급했다.



안신일 의원
(장군면·한솔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안전 대책 시급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신일 의원은(한솔동·장군면, 더불어민주당) 11월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공공주택과 상가 등 민간건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관리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전기차 화재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하면 열기와 연기 배출에 용이하지 않아 지상보다 진압이 더 어렵고 인명 및 물적 피해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세종시 전기차 충전소 1,849곳 중 86%에 해당하는 1,595곳이 공동주택과 상가 건물 등 민간건물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지하에 설치돼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에 정책 대안으로 ▲신규 심의 대상 건축물에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지상 설치를 유도 ▲공동주택 내 전기차 충전소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전기안전교육 실시 ▲전기차 화재에 전문적인 장비와 지식을 갖추고 대응할 수 있는 소방본부 차원의 교육과 훈련 적극 지원 등이 거론됐다.



이소희 의원
(비례대표,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학력 하향 평준화 해소와 교육자유특구 유치 촉구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소희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시 교육청에 학력 신장을 위한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참여와 다양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주문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청이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관내 대다수 고등학교의 1, 2학년 수학 과목 평균 점수가 30~40점대에 불과한 데다 중학교의 경우 수학과 영어 과목에서 학력 양극화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인재 양성과 교육 혁신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거론했다. 세종시가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학교 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은 물론 자족 기능을 갖춘 미래전략도시이자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구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도 내놨다.

이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교육은 곧 국가경쟁력의 근원이자 지역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며 “시와 교육청은 학력 신장과 교육자유특구 유치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 교육수도로 도약하고 세종의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로 자라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학서 의원
(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지자체 협의 통해 광역버스 무료환승체계 구축 나서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학서 의원(전의·전동·소정면,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광역 대중교통 개선방안에 대해 제언했다.

동 지역 순환 BRT는 일부 생활권의 미조성으로 100%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BRT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의 경우 도착지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배차 간격이 길어 개선 요구가 적지 않다는 진단이다.

또한 다양한 BRT 노선과 내년 M버스 개통을 앞둔 대전에 비해 공주·청주·천안의 경우 시내 중심가까지 2회 이상의 환승과 추가 요금 지불뿐 아니라 자가용보다 2배 이상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광역 대중교통 이용률 저하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을 외면하고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에 공감한다”며 “교통문제 해결과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해 “광역버스 운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노선 개통 추진, ‘무료환승시스템’을 구축하는 적극적인 실행 의지를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세종시 청년 고용률 전국 최하위...실태 조사와 청년기금 설치 촉구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 청년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청년 실태 조사와 청년기금을 설치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해 청년정책 총괄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고 올해 3월에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하는 등 세종시 차원에서 청년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지만,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전국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 방안으로 ▲청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 실시 및 부서 간 협업 체계 구축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개발 및 공공기관 비율이 높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지역인재 의무 채용 지원 방안 마련 ▲청년정책의 추진 재원을 확보하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했다. 박 의원은 관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기반이 곧 지역의 일자리”라고 강조하고 “지역의 산업과 청년이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 청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며 간곡히 호소했다.



유인호 의원
(보람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사계절 특색 있는 콘텐츠로 금강보행교 전국 명소 만들자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금강보행교를 전국적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용 편의·안전 개선은 물론, 사계절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 의원은 “보행교 개통 8개월 만에 엘리베이터 강화유리 파손 등 하자가 발생했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면밀한 점검으로 철저히 보완 및 개선하되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인수 조건과 하자 보증기간을 활용해 LH에 문제 해결을 최대한 요구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금강보행교 상층부에 설치된 생명의 전화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 의원은 “생명의 전화는 극단적 선택 직전에 놓인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것이지만 현행 관리실 연결이 아닌, 119와 전문상담센터가 공동 대응해 적절한 상담과 구조를 병행하는 방안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강보행교를 사계절 즐길 거리 가득한 명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시에서 추진 중인 비단강 금빛프로젝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지금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해 사계절 특색있고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윤지성 의원
(연기·연동·연서·해밀,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미호강, 지역의 역사와 문화 담은 이름 되찾아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윤지성 의원(연기·연동·연서·해밀, 국민의힘)은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천(川)’에서 ‘강(江)’으로 바뀐 미호강의 명칭을 본래의 뜻과 역사가 담기도록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지성 의원은 “‘미호’라는 이름이 역사성과 인문·지리적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는지, 명칭 변경 과정에서 지역사회의 온전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국토부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인공 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명을 정하는 기본원칙으로 ‘지역의 정체성, 역사성 및 장소의 의미 등을 반영하는 지명 등을 존중’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미호강의 옛 이름과 역사적 의미에 대해 알리고,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충실히 이행한 뒤 명칭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미호강이 본래의 뜻과 역사를 담은 이름을 찾아 우리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역사 문헌 발굴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전했다.



최원석 의원
(도담동,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최원석 의원(도담동, 더불어민주당)은 11월 25일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충청권 세계대학경기대회의 경제적 효과가 지속되도록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스포츠·MICE 산업 거점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개최되는 만큼 지역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리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경기장 건설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대회가 끝난 후에는 시설 유지와 관리비 부담이 증가해 자칫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최 의원은 국제대회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 지속방안으로 대평동 종합운동장 일대를 ‘글로벌 스포츠·MICE 산업의 거점’으로 계획할 것을 제안했다.

최 의원은 “이번 대평동 종합체육시설 계획 시 MICE 산업을 고려한 복합시설로 조성한다면 각종 국내외 행사를 유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경제 중심지로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는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와 연계한 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광운 의원
(조치원읍, 국민의힘)



〈발언 영상 보기〉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개발’ 포함한 재생사업 추진해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광운 의원(조치원읍, 국민의힘)은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조치원에 시청사 별관 설치와 지역 사정에 맞게 ‘개발’을 포함한 조치원 환경 개선사업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세종시 출범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로 조치원의 상당수 인구와 상권이 정부청사와 신규 아파트단지가 들어선 신도심으로 옮겨가면서 신규 도시 간의 도농 격차가 심화돼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또한 커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 8년 동안 청춘조치원 프로젝트에 1조원 가까이 투입했지만 오히려 인구가 줄어든 상황에 대해 “이대로라면 10만 조치원은커녕 지금 조치원 인구를 지키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조치원 발전을 통한 세종시 균형발전 방안으로는 ▲북부 지역을 아우를 수 있도록 시청사 별관을 조치원에 설치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 ▲지역별 사정에 맞게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실질적인 조치원 지역 환경 개선방안 마련 ▲조치원 인구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추진을 거론했다.



김재형 의원
(고운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노선 개편과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로 버스 접근성 향상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재형 의원(고운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를 통한 버스 노선 개편과 스마트 승강장 형태의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주요 불편 사항으로 1005번 버스의 경우 20분 간격으로 배차되는데 15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다른 간선버스와 격차가 있으며,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에는 10분 단축을 요구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운동을 경유하는 간선버스 노선과 관련해 인근 지역과 연계성이 미흡하다면서 “대전과 공주까지는 연결되나 청주 방면으로 향하는 직접 연결 노선 부재로 많은 통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일부 간선버스 노선을 오송역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중교통 지역 형평성 개선 방안으로는 ▲미시적 단위의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분석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계획 및 노선 개편’ 추진 ▲1생활권의 주요 교통로인 1번 국도에 ‘스마트 승강장’을 적용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를 제시했다.



김현옥 의원
(새롬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지역 특성에 맞는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재검토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현옥 의원(새롬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이·통장 역할 조정과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촉구했다. 오늘날 농촌 인구의 ‘과소화’와 도시민의 공동주택 거주 일반화로 인한 ‘밀집화’, 교통과 정보통신 발달에 따른 ‘행정의 효율화’로 이·통장 역할에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며 우리 시가 시대 상황에 맞는 역할의 재정립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통장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법령에 근거한 이·통장 필수 업무는 유지하되 조례에 따른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 ▲동 지역과 읍·면 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한 이·통장 업무 조정 ▲읍면동별 필요 수준을 고려한 반장 정원 기준 재검토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필수 업무는 문자 서비스 등 간접 수행방식 또는 주민센터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주민 편의 및 봉사에 관한 사항은 봉사단체나 주민자치위원회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며 “아파트 밀집 지역인 동 지역의 경우 통장의 역할을 축소 조정해 여러 통을 통합한 광역통으로 전환하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효숙 의원
(나성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먹는 사람과 만드는 사람, 모두 행복한 학교 급식 제언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효숙 의원(나성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학교 급식실 조리 종사자의 업무 강도 완화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시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수는 총 866명으로 이는 조리종사자 1명이 무려 100명의 식사를 준비하는 수준이다. 공공기관 조리종사자 1명이 평균 65.9명을 감당하는 것에 비하면 절대적인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또한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의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 대체인력 확충 ▲체험연수와 힐링프로그램 등 조리종사자 전문성 강화와 사기 진작을 위한 다채로운 지원 ▲신규 조리종사자 현장 적응 지원을 위해 기존 인력을 활용한 충분한 실무교육 등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12월 8일 관내 한 초등학교에서 일일 조리종사자 역할을 수행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조리부터 배식까지 정해진 시간 안에 학생과 교직원 130여명의 식사를 책임지다 보니 고강도 업무가 쉴 틈 없이 계속되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청은 조리종사자들이 사명감만이 아니라 행복한 일터에서 자부심을 갖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급식 업무의 강도와 특수성을 감안해 섬세한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란희 의원
(다정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시민 참여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 주문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란희 의원(다정동, 더불어민주당)은 12월 15일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결정과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 도입을 주문했다. 박란희 의원은 “8월 시정4기 정책 지원과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특별보좌관이 임명되었고 9월에는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 구성, 11월에는 문화 예술인 6명이 2023년 세종시 홍보대사로 위촉되었지만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치우친 인적 구성에 과연 시민들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다양한 시민 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 구현에 대한 집행부의 의지에 의구심이 든다”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주인이 되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란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과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단체장-지방의회-주민’ 3자가 공동으로 지자체 산하기관장 등을 임용하는 구조의 인사청문제도이다.

◎ 시정질문 ◎

공영자전거 어울링 무료화로 대중교통 분담률 개선해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이순열 의원
(도담·어진동, 더불어민주당)



〈발언 영상 보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1월 14일 제79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탄소중립 시대에 발맞춰 미래교통의 중심이 될 자전거 정책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먼저 차량 진입을 차단하기 위해 자전거도로에 설치한 볼라드가 보행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설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설치 이후 제대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아 자전거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의원은 “볼라드 설치 현황 및 실태 조사를 통해 주기적인 점검·관리 방안을 현장에 적용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자전거도로의 정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추가적인 해결방안으로 ▲자전거도로의 단절 구간과 미설치 구간 및 비분리형 겸용도로에 대한 지역별 정비 방안 마련 ▲버스정류장과 자전거거치대 등 시설물의 자전거도로 침범 사례 관련 해결 방안 마련 ▲자전거도로 노면 불량과 도로 턱 높이 차이 개선 등을 거론했다.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의회 운영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유인호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현옥 위원



여미전 위원



의회사무처 소관 조례안 심사, 주요업무보고 청취 등 실시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18일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열린 2차 회의에서 올해 주요 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6건, 규칙안 1건을 포함해 모두 10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들은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향후 대책을 요구하는 등 의회사무처의 중점 사업에 대한 계획적인 추진을 당부했다.

여미전 위원은 “시의회 방문과 관련해 의회의 문턱이 높다고 생각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며 “함께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시민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전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안전교육 실시도 주문했다.

김현옥 위원은 “안전 관련 문제가 중요시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시의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완강기 사용법 교육 및 모의 화재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며 “안전사고 대체 능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광운 위원은 “주차장 출입과 관련하여 직원들이 직접 통제를 하고 있는데 직원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의회청사 주차장 관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시의회 인력 채용과 관련하여 “과중한 업무로 힘들어하는 직원들을 위해 인력 충원에 힘써주길 바라며 의원들과 상의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면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의정 역량 향상을 위해 세종시 의원들의 교육 연수활동의 활성화와 지원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실시

의회운영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4일 제3차 회의를 열고 의회운영위 소관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본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한 2023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105억 4,062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80만원을 감액하여 105억 3,282만원으로 수정가결했다.

의회운영위 위원들은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요구사항 및 당부를 전했다.

김동빈 부위원장은 “의회청사 시설 조경과 관련하여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 그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미전 의원은 “전문위원실의 환경개선을 위해 직원 선호

도 조사 후 정수기를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면서 “화장실 유지 보수 및 5층 테라스 태양열 그늘막 설치 검토 등 쾌적한 의회청사 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김현옥 의원은 “회기 때마다 의회에 대기 공간이 협소하여 대기하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며 “각 상임위 회의에 대비해 보조 의자를 구입하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이 대기할 때 앉을 수 있어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의회 이미지 제고에도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광운 의원은 “행사 실비지원금과 배상금과 관련하여 매년 불용되는 예산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규모를 떠나 매년 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하여 반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유인호 위원장은 “신규 사업인 인사 관리와 관련해 인사위원회 수당과 여비 등이 과다 요구되거나 중복되지 않게 예산 편성 시 주의해달라”며 철저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또한 “회의한 내용에 있어서 제안하고 답변한 것들은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피드백을 주고 답변한 내용들이 제대로 이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행정복지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임채성 위원장



유인호 부위원장



김재형 위원



김충식 위원



김현미 위원



여미전 위원



최원석 위원



청년세종센터 등 청년 정책 현장 방문

행정복지위원회는 10월 28일 정책적으로 지역 청년들을 지원하는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청년세종센터와 청년문화거리 등을 방문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다정동(7단지 LH 상가)에 위치한 청년세종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입주기관 및 업무 현황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주요시설을 둘러보며 시설 이용자 및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조치원읍에 위치한 청년 문화거리 및 청년 창업공간 등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청년 창업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애로사항 등을 파악했다.

행정복지위 위원들은 집행부에 문화·복지·연계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정책 발굴과 안정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등 내실 있는 청년정책 운영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기관과 협력하여 세종에서 청년사업이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나가겠다”며 “아울러 청년창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2년 제3차 추경예산안 등 심사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6일부터 17일까지 2~3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40건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1월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총 40건 중 32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 1건을 부결했다.

행복위는 11월 17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증액과 감액, 이월사업 등의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기정예산 대비 98억여원 감액한 1조 740억여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위원들은 집행부의 이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소요 예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



을 수립하여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년 예산안 심사 종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3일까지 6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가 행정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1조 498억 6,671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672억(6.84% 증가) 증액된 규모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6차례에 걸친 심의 결과 14개 사업에서 18억 1,776만원을 신설했으며 38개 사업에서 11억 9,352만원을 증액, 24개 사업에서 6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구 출산 장려 정책과 관련해 시민 체감도가 높은 '맘 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에서 2억 2천만원과 난임부부 지원 사업에서 1억원, 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사업인 통합 당직실 리모델링 공사 2,500만원, 세종문화예술회관 시설 및 무대장비 개선 11억원 등이 포함됐다. 행복위는 시급하고 중요한 52개 사업에서 총 30억 1,128만원을 증액했다.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적시성에 대한 납득할 만한 소명 부족 등의 사유로 시민운동장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25억원과 다목적 야외수영장 조성사업 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과도한 사업비 계상과 산출 근거 부족, 사전 절차 미이행 등 세출 예산 편성 부적정 사유로 홍보대사 운영과 시정 홍보 브로슈어 제작 등 22개 사업에서 36억 3,410만원을 감액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청취 및 보류 조례안 재심사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5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보고 청취 및 보류 조례안 재심사 일정을 끝으로 공식적인 상임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소관부서별 공통 및 고유 사무 관련 지적사항 168건에 대한 추진 상황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후 부실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이고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

또한 지난 11월 16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상징물 개정 절차 추진 과정상 오해의 소지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개정 과정 전반의 투명한 공개 및 선포식 개최 주문 등의 사유로 보류되었던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했다.

행복위는 집행부에 미흡한 조례 개정 절차에 대한 유감을 표명한 데 이어 선포식을 통한 개정 과정 공개 및 홍보를 실시하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개정안을 재심의하여 수정안으로 가결 처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주관 충남대학교병원 등 관계 기관 간담회 개최

행정복지위원회는 12월 23일 10시 의회청사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세종시와 세종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추진 중인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준비 현황을 공유하고 안정적인 어린이 응급환자 전문 진료체계 구축 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세종 충남대학교병원 서정호 교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과 관련된 그간의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세종시의 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격려에 감사함을 표하며 향후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임채성 위원장은 "응급상황에 처한 아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신속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하루빨리 지정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도 아동친화도시 위상에 걸맞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소아를 둔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제7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제79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7차 회의



다정동 청년세종센터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산업건설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이순열 위원장



김동빈 부위원장



김광운 위원



김영현 위원



박란희 위원



윤지성 위원



이현정 위원



지하 공동구 등 주요 시설 점검 나서

산업건설위원회는 10월 25일 공동구와 상수도통합관제센터, 싱싱장터, 수질복원센터A를 방문해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 등을 파악했다.

위원들은 국가 중요시설인 지하 공동구에 직접 들어가 전력, 난방, 통신, 상수도 등 매설물 관리 상황과 근무 여건 등을 살펴보고 화재 등 안전사고 대응 실태 전반을 점검했다.

상수도통합관제센터에서는 가압장과 배수지를 비롯해 원격 누수 감시시스템, 수질 계측기, 재염소 시설 등 상수도 시설물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각 가정에 고품질의 수도물을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도담동 싱싱장터를 방문해 농산물의 품질 관리와 판매가 등을 점검하고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등 식품 안전성 및 주변 상권과 갈등 요인 등을 논의하는 등 생산자와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끝으로 산건위는 수질복원센터A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설 내부를 둘러보면서 하수 처리 과정 및 운영 현황 전반을 살피고 시설 가동 상태 및 악취 문제 등을 파악했다. 아울러 향후 공급 예정인 하수 재이용수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제3회 추경 심사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16일 2022년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데 이어 11월 17일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11월 16일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올해 사업 추진 성과와 부족한 점을 되돌아보는 한편, 세종시 본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아 내년에 맞이하게 될 행정정적 환경 변화와 세종시의 미래를 책임질 주요 현안 사업의 발전방안에 대



해 논의했다.

11월 17일에는 산건위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는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CCTV 구축사업 ▲송정~고송선 도로 확포장 ▲버스정류장 냉·온열의자 설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한두리 교 보수·보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2억 5,930만원 증가한 8,572억 5,169만원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11월 22일 예결위 심의를 거쳐 25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됐다.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 심의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1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0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는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0건 중 26건을 원안 가결하고 3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순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에는 지속가능발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 기본 전략과 조화,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한 세종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근거를 마련했다.

박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을 목적으로 공동체

당사자 간 공존과 상생의 협력적 이해관계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또한 이현정 의원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연령·성별·국적 및 장애 유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범용디자인을 적용한 도시공간 및 환경조성 기반을 마련했다.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의결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5일간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총 7,538억 1,620만원 규모로 편성된 2023년 본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15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감액하고, 17개 사업에서 18억 6,073만 5천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심사·의결했다.

산업건설위는 과다한 사업비 계상과 사업 계획 미비 및 산출 근거 부족 등 부적정한 예산 편성 사례를 세밀하게 심사했으며, 세종형 가든쇼 개최와 금강보행교 솔라트리 설치 등 행사성 사업이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보다는 시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고 밝혔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보고 청취

산업건설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5일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보고·청취를 끝으로 올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190건에 대한 후속 대응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은 후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순열 산업건설위원장은 "조치원역 KTX 정차 및 KTX 세종역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국토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한 당위성 개발과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이끌어 달라"고 요청했다.



제7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업건설위원회 현장 의정활동



제79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교육안전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이소희 위원장



김현옥 부위원장



김학서 위원



김효숙 위원



안신일 위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5일부터 16일 양일간 세종시교육청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을 예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는 11월 15일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불용 또는 이월 등의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계획 변경 등 기정예산 대비 136억여원 증가한 1조 2,501억여 원 규모로 편성된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의 명시이월 사업 중 누락된 내용과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전까지 수정 예산안을 제출토록 했다.

11월 16일에는 세종시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고 원안 가결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2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179억 3,77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9억 182만원(27.79%)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77억 64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484만원 증액 편성했다.

교안위 위원들은 심의 과정에서 시민안전실에 최근 행사 추진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다양한 안전대책 수립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616억 2,802만원으로 기정액 618억 1,788만원 대비 0.31% 감소한 1억 8,985만원 감액됐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616억 2,802만원으로 기정액 618억 1,788만원 대비



0.31% 감소한 1억 8,9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다.

또한 소방본부에는 재해 재난 및 연말연시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민한 출동대기 태세 등의 상시 점검을 당부했다.

세종시교육청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청취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17일과 21일에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2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청취하고,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을 심사했다.

교육안전위원회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세종시교육청 및 교육청 직속 기관 전반에 대한 2022년도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에 대한 내실 있는 정책 반영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올해 행감 조치 결과 및 주요 업무 실적 청취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8일 세종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와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청취했다.

이날 회의에서 시청 시민안전실·소방본부 소관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도 사업 계획의 타당성과 적정성, 실효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미래 교육과 안전 중점 예산안 심사 마무리

교육안전위원회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과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예비 심사·의결했다.

세종시교육청이 제출한 2023년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911억원 증가한 1조 615억원 규모다. 교육안전위는 과다 계상된 업무 추진비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센비 감액 등 총 14억 5,435만원을 감액하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고 학생 사고력 신장을 위해 도서 구입비 7억 6,500만원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1억 6,000만원, 귀국 학생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5천만원 등 14억 5,435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안전 관리 체계 구축 등 사업에서 6,524만원을 감액하고, 어린이 안전 체험 축제 등 6,524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됐다.

소방본부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의 경우 소방 행정 제반 업무 지원 등 사업에서 7,530만원을 감액하고 안전 문화 확산 홍보 등 7,53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했다.

아울러 2023년 세입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기금운용 계획 수정안은 교육감 및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됐다.

‘안전한 전동킵보드 사용문화 정착’ 토론회 개최

교육안전위원회 김현욱 부위원장 주관으로 ‘안전한 전동킵보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15일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에 앞서 발제자인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과제’를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 현황 통계 및 국가별 정책을 비교하고, “전동킵보드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안정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시교육청, 세종시청, 세종남부경찰서, 전동킵보드 대표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열린 토론을 펼쳤다.



전동킵보드 토론회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개합니다.」



안신일 위원장



김충식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재형 위원



김현미 위원



윤지성 위원



이소희 위원



이순열 위원



이현정 위원



임재성 위원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 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2일과 23일 세종시청·교육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했다.

세종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각각 기정 예산 대비 41억원 증가한 2조 1,304억원과 136억원 증가한 1조 2,501억원 규모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이번 추경안에 제2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 보조 사업과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했다.

예결특위는 제3회 추경 예산안 중 예산담당관 예비비 4,000만원을 감액하고, 운영지원과 소관 국경일 행사를 위해 2,500만원, 주택과 주거급여 상수도 요금 감면 전출금 1,5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다.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정 예산 대비 14억원 증가한 4,013억원 규모로 원안 가결됐다.

또한 세종시교육청 2022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했다.

안신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감액 제출된 예산에 대해서는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사업의 경우 남은 기간에 추진 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예산안 제출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예결특위는 12월 6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수정 가결했다.

세종시교육청 2023년도 예산안은 개청 이래 본예산 첫 1조원 시대를 열었으며, 교육청의 새 비전 실현을 위한 재원 확보와 새 정부 교육투자 방향과 연계하여 전년도 본예산 8,704억원보다 1,910억원(22%)이 늘어난 1조 615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학습·심리 정서·신체 건강 등 결손 회복 지원과 교육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이 적절히 배분·편성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각 부서의 사업성 업무 추진비 등 445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운영 등 29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시교육청 교육재정 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 4,887억원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526억원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2조원 규모 세종시 예산안 의결

예결특위는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인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했다.

세종시 2023년도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력 회복과 자족적 지역경제 기반 마련 등을 위해 전년도 본예산 1조 9,213억원에 비해 815억원(4.24%)이 늘어난 2조 28억원 규모로 제출됐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시정 전반의 주요 현안 사업과 신규·대규모 사업 중 요구된 예산이 과다 계상됐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검토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60개 사업에서 8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 운영 등 112개 사업에 87억 2,400만 원을 증액했다.

또한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당초 계획 대비 1,007억원(25.2%) 증가한 5,004억원으로 원안 가결됐다.

안신일 위원장은 “불확실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효율적·전략적인 재정 운용과 풍요롭고 품격있는 세종시 구현을 위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상임 · 특별위원회 활동]

특별위원회
인수점검
공공시설물



이순열 위원장



김재형 부위원장



김동빈 위원



김영현 위원



김현옥 위원



김효숙 위원



박란희 위원



유인호 위원



윤지성 위원

세종시의회 공공특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나성동 복검 방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 제5기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순열)는 11월 8일 새롭게 위촉된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첫 상견례를 갖고 내년 개청을 앞둔 나성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방문해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점검에는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이하 공공특위) 위원과 시민참여특별점검반, 행복청 및 관계 공무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제5기 공공인수 특위 구성 이후 시민참여특별점검반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것이어서 그 의미를 더했다.

공공특위와 시민참여특별점검반은 행복청 관계자로부터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대한 시설물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시민 안전과 이용 편의 향상을 위한 공간별 위험요인과 부실시공 여부 등을 꼼꼼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계단 난간 체결 미흡 ▲계단 옆 추락 방지 시설 보강 ▲모래놀이터 손 세척 시설 추가 ▲주차장 내 주차 위치 확 인용 기동 표시 추가 등을 지적했으며, 특히 보육시설 내 조리실과 화장실 동선이 겹쳐 위생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만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공공특위는 현장점검에서 발견된 미흡한 시공 등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행복청 등 관계 기관에 신속한 후속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이후 조치 결과에 대한 회의를 거쳐 행복청으로부터 해당 공공시설물을 최종 인수할 방침이다.

이순열 공공특위 위원장은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점검해주신 시민참여특별점검반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공공시설물 인수 과정에서 더욱 꼼꼼한 점검을 실시하고 예산 낭비 사례와 안전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자세로 시민 눈높이에 맞는 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22.11.11.)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원안가결	11.11.~12.15.(35일간)
제2항	제7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원안가결	김현옥/김현미 의원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원안가결	
제4항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건의 건		
제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건의 건		
제7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제8항	휴회의 건(2022. 11. 12. ~ 11. 13. / 2일간)	원안가결	

2차 본회의

(22.11.14.)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휴회의 건(2022.11.15.~11.24. / 10일간)	원안가결	

3차 본회의

(22.11.25.)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의 회 단 원 위 원 회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현장의정활동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민원상담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시행규칙안	원안가결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정자료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0항	2023년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자본금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79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청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18항	세종시 사회적경제공동체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19항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4차)	원안가결
제20항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2항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23항	세종특별자치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24항	(재)세종특별자치시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플라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6항	세종특별자치시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변경) 동의안	원안가결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시니어클럽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1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스포츠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3항	시청자미디어재단 세종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5항	(재)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37항	세종특별자치시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원안가결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46항	세종산업기술단지(TP) 운영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7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48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주요 안건 처리 현황 (제79회 정례회)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산 업 건 설 위 원 회	제49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0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1항 2023년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 소상공인 지원센터 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55항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6항 장군면 한다리 농업인복지회관 관리위탁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7항 연서면 봉암2리 마을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제58항 세종 스마트시티 산업생태계 조성 및 디지털 아카이브 유지관리사업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59항 세종특별자치시 성장관리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원안가결
	제60항 2030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원안가결
	제61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제62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수소충전소 부지 내 수소충전소 설치)	원안가결
	제63항 대전세종연구원 (탄소중립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원안가결
	제64항 세종특별자치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6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제67항 세종특별자치시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8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69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수정가결
	제7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7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72항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안	원안가결	
제73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규칙 조속 제정 및 의정연수원 확대 설치 건의안	원안가결	
공 익 위 원 회	제7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원안가결
	제75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제76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예 산 결 산 위	제77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가결
	제78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원안가결
	제79항 2022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제80항 2022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제81항 휴회의 건(11.27.~.12.14.)	

4차 본회의

(22.11.25.)

의사일정	안 건 명	처리결과	비 고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수정가결	
제2항	지역인재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	원안가결	
제3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수정가결	
제4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제5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제6항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원안가결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 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 2. 협의회 구성, 협의자문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3. 피해 발생 및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는 등 피해구제책 마련

무엇이 달라지지?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 사항을 협의하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비

관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등

왜 필요하지? 개인정보 보호 관계기관 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을 규정

여미전 의원 외
2022.11.1 15명 발의
2022.11.25.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원안 가결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언제부터?

조례를 공포한
2022.12.20.일부부터 시행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022.10.31.
유인호 의원 외 15명 발의
2022.11.25.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수정 가결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언제부터?

조례를 공포한
2022.12.20.일부부터 시행

왜 필요하지? 세종특별자치시와 관련된 민간 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

관계 법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1. 시장은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민간 기록물수집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 2. 수집된 민간기록물은 공공기록물과 구분하여 별도의 수장고에 보존
- 3. 분류·보존 기간·보존방법 등 기록 관리에 관한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규정 등

무엇이 달라지지?

민간기록물의 대상, 수집방법 등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수집 사업의 지속성 보장과 함께 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

- 1.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 마다 수립·시행
- 2. 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 3. 자율상권조합 설립 인가 방법 및 절차 규정
- 4.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를 규정 등

무엇이 달라지지?

서울, 경기도 등 9개 지자체 조례 제정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

왜 필요하지?

상권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방지와 쇠퇴한 상권 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 낙후됐던 지역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관계 법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11.1. 박관희 의원 외 17명 발의
2022.11.25.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원안 가결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언제부터?

조례를 공포한 2022.12.20.일부터 시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범용디자인 기본 조례

2022.11.1. 이현정 의원 외 13명 발의
2022.11.25. 제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원안 가결

어떤 절차로 통과됐지?

왜 필요하지?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와 관계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 가능한 범용디자인의 도시환경 조성

언제부터?

조례를 공포한 2022.12.20.일부터 시행

- 1.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범용디자인 체계적인 적용을 위해 범용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시행
- 2. 세종특별자치시 범용디자인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운영
- 3. 범용디자인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무엇이 달라지지?

시행계획, 가이드라인, 시범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관계 법령: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야의 종 소리처럼 희망과 긍정의 기운이 멀리 퍼져가길

세종시 출범 이후 첫 제야의 종 행사가 연서면 봉암리에 위치한 세종 보림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과 최민호 세종시장 등 각계에서 세종시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모여 새해 세종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33번 타종했습니다.

검은 토끼의 해인 계묘년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일상 회복을 통한 안심 및
안전 사회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은은하게 멀리 퍼지는 제야의 종소리처럼 희망과 긍정의 기운이 세종시 곳곳에 전달되길 기원합니다.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입법정보

60

생활법령

62

주요 입법동향



70

최근 시행 법령

72

타자치단체 최근
제개정 자치법규

생활
법령

허위·과장된 정보를 준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는?

출처-법제처(생활법령)



“나사장” 씨는 몇 년 전 화장품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점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 당시 나사장 씨는 가맹본부로부터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 5곳의 전년도 매출을 기준으로 작성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맹점 창업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이 산정서는 매출액이 낮은 가맹점 일부를 임의로 제외하고 장사가 잘 되는 가맹점을 포함시켜 예상매출액을 높게 산정하여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사장” 씨는 점포를 창업한 이후 매출이 잘 나오지 않아 점포 차임 등 고정으로 지출되는 비용 때문에 영업손실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사장” 씨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친구1

사장이 운영을 잘 했어야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은 가맹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경제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인데 그 책임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행위로 돌려 가맹본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친구2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점 운영 비용은 충당하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거야. 만약, 제대로 된 산정서를 받았으면 가맹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 평결 】

정답은 2번. 친구 2: 가맹본부에서 작성한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믿고 가맹점 운영 비용은 충당하고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 거야. 만약, 제대로 된 산정서를 받았으면 가맹계약을 했을까? 그러니까 허위로 부풀린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해. 입니다.

위 사례는 가맹본부가 제공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실제 매출액에서 점포 차임 등 실제 지출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1. 가맹본부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 금지의무(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령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의 범위와 그 산출근거를 반드시 서면(예상매출액 산정서)으로 제공해야 하며, 예상매출액 범위를 산정할 때는 인근 가맹점을 가장 인접한 가맹점 5개로 한정함으로써 가맹점을 임의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고 매출환산액 계산방법도 정하고 있다.

-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함으로써 마치 안정적 사업운영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한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서 가맹사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영업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① 원심 판단(서울고등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나2009911 판결)

- 원고들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영업손실(매출로 충당되지 아니한 가맹점 운영 지출비용) 손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여부가 가맹점사업자의 운영능력이나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에 좌우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통상의 손해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면서, 이를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하였다.

② 대법원 판단(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 원고들과 같은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인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이 원고들 스스로 예상가능한 지출비용보다 더 크다는 점도 고려하여 적어도 영업손실은 없으리라 기대하면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점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즉 피고가 원고들에게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원고들은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비용을 지출하였다. 가맹점 개설 이래로 계속 원고들 가맹점 매출액은 제공받은 예상매출액 산정서상 매출액 범위 최저액에도 미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에게는 매출로 충당하지 못하는 점포 차임 등 지출비용 만큼의 영업손실까지 발생하였다.

-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물품대금뿐만 아니라 물품대금의 일정 비율 금액을 영업표지 사용, 영업지도 등의 대가로서 따로 받는다. 이와 같이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운영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손실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받을 수 있는 가맹계약의 내용을 고려한다면, 피고가 가맹점 운영에 따른 예상수익상황에 관하여 허위·과장의 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맹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원고들로 하여금 가맹점 개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할 목적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 또한 가맹계약에는 가맹점 개설에 관한 사항은 물론 가맹점 개설 이후 가맹점 영업에 관한 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고, 가맹사업법에도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되, 계약기간에는 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경영과 영업활동의 지원을 계속해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

-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들의 영업손실 손해는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한 정도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피고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고,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대하여는 피고의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 원고들의 영업손실에 원고들의 운영능력, 시장상황 등 다른 요인으로 인한 부분이 구분되지 않은 채 포함되어 있어 영업손실 중 피고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실 부분의 구체적인 액수 입증에 사안의 성질상 곤란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구 가맹사업법 제37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공정거래법 제57조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법에 따라 객관적이고 정확한 근거에 따라 예상수익상황을 산정할 주의의무가 있고 가맹본부가 임의로 선정한 가맹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예상매출액 범위 최저액을 과다 산정한 것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위법행위에 해당하며, 이 사건에서의 영업손실은 객관적으로 예측 가능한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된다 고 판단하여 가맹본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나사장”씨는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가맹본부를 상대로 영업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평결일 : 2023년 1월 9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활
법령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만한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출처-법제처(생활법령)



A씨는 굴삭기를 구입하기 위한 비용이 필요하다는 B씨에게 8천만원을 대출해주었습니다. B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겉으로 보서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굴삭기운전자격증도 제출하여 의심 없이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대출금을 B씨에게 지급하지 않고 B씨에게 굴삭기를 판매하기로 한 사람에게 직접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B씨가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A씨가 상환을 요구했지만 B씨 측은 약정 당시 제출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이며, 지능지수가 52에 불과한 B씨에게는 대출약정을 할 의사능력이 없었으므로 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적장애를 가진 B씨에게 대출약정을 체결할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A씨 굴삭기가 꼭 필요하다길래 대출을 해준 것뿐인데 이 계약이 무효라니요! 대출약정을 할 때 보니 대화도 잘하던데, 어떻게 의사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나요?

B씨의 보호자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운 대출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억울해요!

[평결]

정답은 2번. B씨의 보호자: 심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어려운 대출 계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도 억울해요! 입니다.

위 사례는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A씨와 대출약정을 체결할 당시 독자적으로 자기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의사능력”이란 자기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이나 지능을 말하며, 의사능력을 흠결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참조). 우리 대법원에서는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특히 어떤 법률행위가 그 일상적인 의미만을 이해해서는 알기 어려운 특별한 법률적 의미나 효과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 의사능력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일상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등 참조)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제2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6호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 제6호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은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하더라도 지적장애인으로서는 법령에 따른 보호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의학적 질병이나 신체적 이상이 드러나지 않아 사회 일반인이 보았을 때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적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이 지적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의사능력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 단순히 그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만을 근거로 의사능력을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되고, 의학적 진단이나 감정 등을 통해 확인되는 지적장애의 정도를 고려해서 법률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난이도, 그에 따라 부과되는 책임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이 과연 법률행위의 일상적 의미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지,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나 경위 등에 비추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대출약정의 대출금을 소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굴삭기는 실질적으로 대출금채무의 담보가 되고 대출금은 굴삭기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되는데, 이와 같은 대출 구조와 내용은 해당 지적장애인의 지적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정도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굴삭기운전자격증은 위조된 것으로 대출약정 당시 해당 지적장애인에게 굴삭기를 운전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출금은 굴삭기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되어 이를 받은 적이 없는데도 굴삭기운전자격증을 위조하면서까지 대출약정을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 참조).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이 사례에서 단순히 외관이나 피상적인 언행과는 별개로 지능지수 52에 불과한 지적장애를 가진 B씨가 대출약정의 법률적인 의미나 효과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대출약정 당시 B씨의 의사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이 대출약정은 무효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12월 2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최근 공포법령

0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2. / 대통령령 제33220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활성화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기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을 실시하고, 국가기관 등이 이용할 수 있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38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의 절차,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보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기준·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02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시행 2023. 1. 5./행정안전부령 제373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고, 제재처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승강기 등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등록취소 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12개월의 사업 전부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거나 탱크시험자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으로 위반행위자가 더 이상 영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정취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03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3. 1. 3./대통령령 제33196호)

삼차원프린팅 장비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계약 또는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어 해당 장비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보도록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한편,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산업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를 고려하여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태료 금액을 100분의 7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처분의 감경 사유를 정비하려는 것임.



04 수도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 3./환경부령 제1015호)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의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승인지역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는 공장이라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오수 및 폐수의 외부 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集水施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영위할 수 있는 제조업의 범위에 폐수가 발생하지 않아 수질에 영향이 없는 곡물 제분업 공장, 기타 곡물 가공품 제조업 공장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장설립승인지역: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이나 취수시설의 상류·하류 중 일정 지역은 공장설립이 제한되나,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장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지역

0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2./ 대통령령 제33202호)

하도급계약 입찰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종합심사낙찰제가 적용되는 건설 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의 입찰금액 및 낙찰결과 등을 입찰참가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을 공시하도록 하며, 하도급대금 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외에 중소기업중앙회도 수급사업자를 대신하여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57호, 2022. 1. 11. 공포, 2023. 1. 12. 시행)됨에 따라, 건설하도급 입찰결과의 공개대상 공사 및 공개 방법,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공시사항, 중소기업중앙회의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벌점의 누적점수를 산정하는 경우 고려하는 경감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6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2023. 1. 2./ 국토교통부령 제1185호, 환경부령 제1019호)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입주자 간의 갈등을 줄이기 위하여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충격 소음의 층간소음 기준 중 1분간 등가소음도*의 기준을 현재 주간 기준 43데시벨, 야간 기준 38데시벨이던 것을, 앞으로는 주간 기준 39데시벨, 야간 기준 34데시벨로 강화하려는 것임.

* 등가소음도: 음압이 항상 변동하는 소음 에너지를 시간상으로 평균하여 변환한 소음

07 고용보험법

(시행 2023. 1. 1./법률 제19210호)

실업의 신고방법에 비대면에 의한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국민편의를 증진시키고, 기간제·파견근로자의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의 지급을 보장하여 이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 적용 최저연령 규정을 정비하고,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 또는 자영업자 등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복수 피보험자격자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 주요법안

0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2.11.28.)는 3건(전라북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새만금경제자유특별 지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 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2.12.1.)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종전 전라북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 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0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온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들을 통일적이고 종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각종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 때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동원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활동에 필요한 장비 등의 비축·관리에 관한 사항과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물품 중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른 재난 관리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자 함. 또한, 공급망관리체계 및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재난관리지원기업 및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 등에 대한 지정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신종 복합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도 하여금 관할구역의 재난관리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려는 것임.

03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현행법은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과 기술역량 강화를 통하여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2022년 8월 4일 시행되었음. 그러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공장 착공이 지방자치단체의 공업용수 취수 관련 인·허가 지연으로 발목이 잡히고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원체계 미흡 및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점차 현실화되고 있어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 및 산업기반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재량권을 축소하여 법상 정해진 기간 내에 인허가 절차가 반드시 진행되도록 하는 등 인·허가 과정을 보다 투명화하고, 전략산업등의 전문인력양성 체계 재정비, 전략산업에 대한 예타 면제 등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촉진하고자 함.



04 자원순환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환경노동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경제 패러다임은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하여 대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는 순환경제로 전환되고 있음. 이와 같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존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처분에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 「자원순환기본법」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생산·소비·유통 등 전 과정에서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순환경제특별회계의 세입을 확충하여 지자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본계획(2018~2027년) 상 2027년 폐기물의 최종처분을 목표 3.0% 대비 2020년 실적이 10.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 존속기한을 현행 2023년 1월 1일에서 2028년 1월 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임.

05 조세법 처벌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

조세법칙사건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조세법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조세법칙처분 없이 조사를 종결하려는 경우 그 종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종전에는 ‘조세법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법칙행위 혐의자’가 도주할 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06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안

(위성곤의원 등 23인)

농어촌 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로 농어업에 종사하는 인력이 줄어들고 있으나, 작업환경 및 주거여건 등이 열악한 탓에 농어업 분야의 신규 인력 유입 역시 저조한 실정임. 농어업분야의 고용인력 부족 문제는 지방소멸, 농어업의 상대적 쇠퇴 등 구조적 문제와 연관되어 다른 산업 분야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시급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농수산물 생산의 근간이 와해되어 식량안보와 농어촌사회의 유지에 커다란 위협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됨.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농어업고용인력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도 및 시·군·구계획을 세우며, 농어업고용인력 수요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외국인근로자의 농어업 분야 배정 규모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또한 시·도지사 및 시·군·구의 장이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과 근로환경 및 농어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하는 등 농어업고용인력 육성 및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최근 국회 접수 주요법안

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5인)

(안 제56조, 제57조 및 제65조)

승강기 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약 123조 원으로 안전의식 강화 등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음. 국내 승강기 운행 대수가 78만 대로 세계 7위, 연간 신규 설치 및 교체 대수는 4만6천 대로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함.

그런데 국내 승강기 시장의 구조가 외국 기업과 국내 일부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고 국산화의 한계 등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따라서 우리나라가 비교 우위에 있는 인공지능, ICT 기술 등의 접목을 통해 승강기 제작 및 운영기술을 고도화 하고, 관련 중소기업 육성 및 수출 지원, 소재 및 부품 등의 국산화를 통해 국내 승강기 산업 전반을 선도해 나갈 대책 연구기관의 운영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가칭 ‘승강기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운영하여 국내 승강기 산업의 연구개발 강화 및 관련 산업 활성화로 대한민국 승강기산업의 세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0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등 11인)

(안 제40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 및 보관에 관한 규정만 명시하고 있을 뿐 의료기기·의약품 등의 폐기 책임에 관한 규정이 부재함. 이로 인해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료기기 등이 방치되고 있음.

또한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은 인터넷 개인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소개되어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된 의약품·의료기기의 노출 및 오용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계획서를 받은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가 그 처리계획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의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0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연숙의원 등 10인)

(안 제11조의3제1항, 제30조제2항 및 제60조제1항제4호)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투약하기 위하여 제공하거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고,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경우가 매년 약 8,000여명이 있고,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경우도 있었음. 이에 미국,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처방 후 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대한 심사 내용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마약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 내용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0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의원 등 10인)

(안 제76조의4 신설 등)

현행법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리고,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사용자로 하여금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와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수단이 없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장 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0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영인의원 등 10인)

(안 제18조의2제1항 및 제19조제2항 등)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6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보장하고 있고, 현행법은 근로자에게 10일의 출산휴가와 1년의 육아휴직을 보장하며, 사업주가 근로자가 청구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여전히 육아휴직 후 복귀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한편, 남성의 육아휴직 비중은 2021년 기준 전체 육아휴직자 중 26.3%로 여성 근로자 대비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 여전히 출산·양육이 여성에게 전담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가부장적 인식이 지속될 경우,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기업의 부담으로 인식하게 되며, 여성은 채용과정이나 근무 중 차별과 경력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음.

특히, 출산으로 인한 일자리 단절은 여성의 노년 빈곤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등 여성의 생애주기에 상당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는 저출생 문제의 악화에도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므로 출산·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가 필요함. 이에 스웨덴·노르웨이 등에서 아빠 출산·양육 의무휴가를 도입하여 출생률이 높아진 사례를 고려하여, 배우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주의에서 의무제로 변경하고자 함.

이에 배우자에게 적절한 자녀 양육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출산휴가를 기존 10일에서 30일로 연장하는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1년) 중 3개월의 기간을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함



최근 입법 예고 주요법령

0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01.27.까지) / (안 제22조의2 신설 등)

하나의 단위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복수노동조합 제도에서는 조합원에게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탈퇴를 강요하거나, 탈퇴를 저지하기 위해 탈퇴의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개인적·집단적 불이익조치와 방해조치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가 근로자와 단위노동조합의 탈퇴를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방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을 명하며,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보장하고자 함.

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1.22.까지) / (안 제44조의7제1항제2호의2 및 제72조제1항제1호의2 신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특정 인물 또는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정보는 개인의 명예 및 인격권 등을 침해하거나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여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그러나 온라인 상의 이러한 정보는 명예훼손보다는 모욕 또는 혐오·차별 표현에 해당하여 현행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는 점에서 별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온라인 상의 혐오·차별 정보 유통의 죄를 신설하고, 그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

0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1.22.까지) / (안 제16조의3제4항 및 제16조의4 신설)

현행법은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업은 만성적인 인력 부족에 시달리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에 입주한 기업에 대하여는 기존 지방 소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뛰어넘는 정책 방안의 제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소멸 수준을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역소멸 지수를 개발하고, 그 지수에 근거하여 지역소멸 수준에 따라 지역 소재 기업에 차등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국가균형발전계획 및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지역소멸 지수를 고려하게 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04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01.22.까지) / (안 제1조 및 제2조의2)

현행법은 전기가 공급되지 않은 농어촌에 전기 공급을 촉진하여 농어업 생산력의 제고와 농어민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면서, 그 적용대상 지역을 농어촌전기공급사업계획 수립 당시 그 주민의 대부분이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제정 당시와 달리 지금의 농어촌은 농어업 외에도 농공단지 조성, 농어업으로 생산된 원재료의 가공판매 시설 및 음식점 등 휴게시설 운영을 위하여 전기 공급이 필요뿐만 아니라, 귀농·귀어 인구 및 전원주택의 증가 등으로 농어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경제활동을 하는 촌락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 법의 목적과 적용대상에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기공급을 촉진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하고, 그 적용 대상 지역에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 외에도 기타 정주를 목적으로 하는 촌락까지 포함하려는 것임.



0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1.22.까지) / (안 제3조제1항제1호)

현행법은 육군·해군·공군의 정규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해 육군·해군·공군에 각각 사관학교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사관학교에 입학하려는 사람을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로 한정하고, 제대군인의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학연령 상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 장교를 양성하는 사관학교가 사관생도 입학에 엄격한 나이 제한을 두어 지원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에 따라 사관생도의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됨. 이에 사관학교 입학자격을 현행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17세 이상 23세 미만”으로 개정하여 사관학교 입학 기회를 확대하고 향후 우수한 병역자원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0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1. 22.까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별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면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일부를 산업·유통시설용지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 또는 기반시설 등의 설치비용으로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경제자유구역별로 바이오·헬스케어, 미래모빌리티 등의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육성하거나, 보다 지속적인 핵심전략산업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발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를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경제자유구역에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07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01.22.까지) / (안 제16조의3제1항)

현행법은 저소득층의 에너지이용권 발급에 관한 근거를 두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에게 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에너지이용권을 발급하도록 하되, 그 발급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하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22년에 한정하여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로 확대하였는데, 이와 같은 확대 정책을 소외 계층에 대한 복지정책으로서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현재 하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이용권 발급대상의 범위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법률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더 많은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1.22.까지) / (안 제20조, 제21조, 제52조 등)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정당명부를 현행 폐쇄형에서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권역별 정당 의석배분은 정당별 후보자 득표수의 합으로 결정하며, 비례대표국회의원을 전국 단일 권역에서 15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어 선출하도록 함.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 후보자가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중복 출마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각 정당 후보자의 취약지역 출마 유인을 제고하고, 고착화된 지역 편중을 개선하며, 대립과 갈등을 통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는 정치문화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성숙한 정치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09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제출 '23.1.22.까지) / (안 제201조의2)

현행법은 영장실질심사에 있어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피의자를 강제 구인한 후 심문하고 있음. 이는 심문기일에 출석의사가 충분한 피의자들에게 자발적으로 법정에서 출석해 방어할 권리를 전혀 주지 않은 채 강제처분을 하는 것임. 또한, 심문기일에 심문을 마친 피의자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최대 24시간까지 유치되고 있어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음. 이에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의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 자진 출석하게 한 후 심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함으로써 자발적 출석 의사가 분명한 피의자들의 실질적 무기대등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을 실현 시키려는 것임.

최 근 시행법령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1. 14.][법률 제19087호, 2022. 12. 13., 일부개정]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5일 이내에, 중수도의 설치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한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등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이 법령에서 정한 처리기간 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3.][대통령령 제33230호, 2023. 1. 13., 일부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장애등급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각각 약 5.5퍼센트 인상함으로써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1. 13.][대통령령 제33226호, 2023. 1. 13., 일부개정]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상별로 각각 약 5.5퍼센트 인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보상금 인상에 맞추어 보상금의 지급정지 수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 2023. 1. 12.][법률 제18751호, 2022. 1. 11., 일부개정]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도·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받은 자 등이 현장 지도·감독을 거부·방해·기피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는 경우에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최 근 시행법령

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된 부정행위를 한 근로자,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용자 등의 제한 기간을 연장하고, 부정수급액 등에 대한 추가징수금 범위를 확대하며, 사업주와 공모하여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타법개정]

「수산업법」의 양식업 관련 조항이 「양식산업발전법」으로 분법(2020년 8월 시행)된 것을 계기로 「수산업법」의 조문 구조 등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기존의 어업관리제도의 한계 극복을 위해 엄격한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관리를 전제로 기존의 어업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시범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총허용어획량중심의 어업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체계적인 어구관리를 위해 폐어구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있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과 어구실명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일정기간 특정 구역의 어업을 제한한 뒤 어구 수거 명령을 통해 폐어구를 집중 수거하는 "어구 일제회수 제도"를 명확히 하는 어구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에 더하여 어구·부표의 전주기적 관리 및 해양쓰레기 자율회수를 통한 해양쓰레기 저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어구보증금제"를 이 법에 도입하고, 어구 등을 구입한 자에게 어구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미환급보증금의 관리,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의 운영, 국가의 어구보증금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23. 1. 12.] [법률 제18753호, 2022. 1. 11., 일부개정]

현행법은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에 업무상 이유로 유산 및 유산증후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반면,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요인에 접촉하여 선천성 질병을 가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및 지급되는 보험급여에 관한 사항 등을 새롭게 규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업무상 사고, 출퇴근 재해 또는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로 인하여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대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그 자녀를 근로자로 보아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타 지자체 제개정 자치법규

서울 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23.01.12]

제안이유

고용없는 저성장, 소득 양극화 심화 등 전례 없는 경제 불안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회 안전망 붕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제적·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고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에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함(제1조).
- 나. 주민생활안정제도 지원기준 설정 기준을 변경함(제3조제4항).
- 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서울안심소득 대상자를 신설함(제4조제1항제4호).
- 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신설함(제6조).
- 마. 서울형 긴급복지를 신설함(제7조).
- 바. 서울안심소득을 신설함(제8조).
- 사.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인천 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하도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업체 하도급 권장 비율을 상향하여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지역업체 하도급 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지역업체 참여 근거 강화(제8조제2항 및 제3항)

부산 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2.12.28]

제안이유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행사 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행사 시에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사고 발생 시 대응을 통해 이태원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등 용어에 대해 정의함 (제1조)
- 나. 사고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제4조)
- 다.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함 (제5조)
- 라.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람·차량 통행 제한 등 조치사항에 대해 규정함 (제6조)
- 마.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의무 등에 대해 규정함 (제7조)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01.02]

제안이유

경기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현장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빠른 피해복구와 도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함(제3조).
-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의 근거를 규정함(제4조).
- 다.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역할 및 구성을 규정함(제5조 및 제6조).
- 라. 단장의 임무 및 실무팀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7조 및 제8조).
- 마. 재난상황의 신속한 정보공유 및 보고,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및 제10조).

광주광역시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시행 2022.12.30]

제안이유

광주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함.

주요내용

- 시의회 의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 수립(제5조)
-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직장교육 의무화(제6조)
- 시의회 갑질 피해 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제7조)
-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심리상담 치료, 회복 지원 등(제8조)
- 갑질 행위를 한 의원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사항 등(제10조)
- 갑질 신고와 관련한 보복행위 및 허위신고에 대한 조치(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 2022.12.30]

제안이유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콘텐츠사업을 선도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상징적·제도적 위상을 확보하고,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통하여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문화콘텐츠 기업 등의 유치·창업 및 제작 지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정의 (제1조, 제2조)
- 나. 진흥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부터 제7조까지)
- 다.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개발의 촉진 (제8조, 제9조)
- 라. 전문인력 양성 및 국제교류 (제10조, 제11조)
- 마. 문화산업단지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조성 등 (제12조)
- 바.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

충청북도

충청북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시행 2022.12.30]

제안이유

인간활동을 통해 널리 퍼져 있는 플라스틱 위해성을 알리고 더 나아가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 및 제거로 충청북도 내 생태환경 보호 및 충청북도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 정의(제1조, 제2조)
- 나.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 다.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5조)
- 라. 미세플라스틱 자원순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6조)
- 마. 미세플라스틱 저감, 제거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7조)
- 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8조)



의원 발언함

제79회 정례회 기간 중 의원들의 주요 발언 내용을 모아 소개한다.

김광운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읍·면 지역 LPG 소형 저장 탱크 보급 사업에 대해(2022.12.5.)

지금 난방을 하더라도 유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등유라든지 이런 걸로 난방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실태고, 그다음에 연탄도 사실은 때는 데도 있겠지만 수급률도 모자라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도농 간의 격차 해소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뭔가 획기적으로 자주 면 지역에 해 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빈 의원

금강보행교 운영 관련 추가 예산 투입 및 사업 추진에 대해(2022.12.12.)

공원관리사업소가 1년에 유지비 예산이 160억이래요, 중앙공원, 호수공원, 도도리파크, 보행교까지 해 가지고. 이것을 더 확장하게 되면 돈이 또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가를 보고 그리고 공원관리사업소하고도 중복되지 않게끔 협의를 해야지, 자주 넓은 광장만 자주 만들면 뭐 합니까.



김영현 의원



과다한 연구용역 비용 발생에 대해(2022.11.17.)

지금 시장님의 모토가 긴축 재정 들어가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겠다는 하는 부분인데 우리 시가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들이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데 각 국에서 조금만 신경 써 주시고, 지금 이 부분도 보면 사실 중복 유사 연구용역비로 들어갔다가 다시 빠지는 부분들이 거 잦아요. 사실 재용역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 건데 이런 것도 자주 뒤늦게 발견이 되면 또 이렇게 추경에서, 물론 삭감이 돼서 다행이긴 하지만 모르고 넘어갔다면 계속 추가적인 용역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김재형 의원



소방안전교육 및 체험시설 확충에 대해(2022.12.12.)

최근에 안전이 많이 강조되고 있잖아요. 유치원이든 아이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적으로 더 조성해 주시고 이에 따라서 진짜 체험시설 관련해서 확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에 적극 반영해서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교육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해(2022.11.30.)

제가 5분 발언에서도 지적을 했지만, 시민참여단을 꼭 70명으로 과다하게 편성해야 하는지. 위원 70명이면요, 2450만 원 정도가 수당으로 나가요. 그런데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하면서도 위원회를 축소하자고 했었는데 70명이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의원 수를 축소할 계획은 없으신지. 만약에 한 30명 정도로 운영하는 게 무방하다면 본 위원은 3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서 의원 (제2부위원장)



세종시교육청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2022.12.1.)

공유재산과 관련해 시나 어디 거를 분할 받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민간인들은 문턱이 높아요. 그런 부분들을 매각해서 개인한테 넘어가면 세금 들어올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다지 필요 없기 때문에 매각하면 그만큼 현찰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잖아요. 내 거는 잔뜩 갖고 있는데 남의 것만 받아서 계속 쓰려고 하다 보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현미 의원

세종시 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2022.12.7.)

최근에 우리 세종시에도 체육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U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체육시설들이 그냥 우후죽순 늘어날 것들이 아니고 U대회 대비해서 이것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가지고 갈 것인지 그 이후에 보수 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들이 고스란히 시민들의 혈세로 오지 않을 것인지까지 고민해서 체육시설 설립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옥 의원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무상급식비 재원 마련 등에 대해(2022.12.1.)

목적이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목적이 있는 교육세와 시도 무상급식비를 등치하거나 지자체 부담 급식비를 교육청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5조 이상이 되는 금액이고 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크게는 교육부가 같이 이거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육청 자체에서는 지자체의 비법정전출금 무상급식 부담금을 추가 부담하더라도 국세인 교육세의 법정전입금 3조 원 정도가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자체 또한 교육청의 급식비 추가 부담으로 절감되는 재원 1조 7000만 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지방대와 지역인재 양성 사업비로 재원을 확보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대학은 지자체 및 관내 산업체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 양성 그 다음에 의대·치대·약학과 등 관내 고등학교 출신 특별전형으로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확대 부분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김효숙 의원

세종시에 아동과 성인들을 위한 안전체험시설이 없는 문제에 대해(2022.12.5.)

시민들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조금 더 하시라는 말이에요. 국제안전도시 인증받는 것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아이들이 조금 더 많이 가서 이런 체험을 통해서 재난·재해에 조금 더 대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는 게 시의 역할 중에 하나일 텐데 이 부분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하시는 걸로 보이거든요. 국제안전도시인증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나 시민하고 시민이 더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과 관련된 노력들, 정책들 그게 필요한 것으로 보이면서 또 하나 말씀드리려는 부분은 시랑 교육청이 존재하는 이유는 시민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시도, 교육청도 같이 협력해서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어려움을 보이고 있어요.



박란희 의원



고용 창출 목표 설정과 계획 달성에 대해(2022.12.5.)

예산 집행 달성률을 보면 예산은 77.5%밖에 사용을 안 한했는데 고용 창출은 113%를 달성했다는 거지요. 이걸 봤을 때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 창출 목표가 너무 안일하게 낮은 수준으로 잡힌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이 있었고, 수치상으로도 매년 동일한 수치를 낮게 설정하고 그것을 달성했다고, 100%가 넘는 달성률을 계속해서 표기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도전할 만한 그리고 성과를 낼 만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해 주시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의장)



제79회 정례회 폐회사 중(2022.12.15.)

한 해 세출 예산 증대는 시민 복리 증진 측면에서 반길 일이지만, 재정 건전성 확보가 수반되지 않으면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 모두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 적시 적소에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신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에 대해(2022.12.7.)

2024년부터 25% 특례 지원이 종료돼서 교부세 수입의 유동성 변화가 클 것으로 우리가 당연히 예상하고 있고 이번에 의회 차원에서도 저희가 함께 대응했습니다. 사실은 특례뿐만 아니라 플러스알파나 아니면 제주도처럼 급성장하는 도시가 세종시인데, 또 지방분권의 상징적인 도시고 변화도 굉장히 많잖아요. 유연한 대처 또는 거기에 앞서서 사실은 좀 큰 줄기를 잡아야 해서 이번에도 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도 내용을 보면 논리를 잘 준비하셨더라고요. 그런 정확한 논리나 대응에 대해서는, 물론 내부적으로 중요하게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감춰야 할 부분도 있지만 주민들께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조금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미전 의원



세종시 홍보대사 및 브랜드 슬로건 선정 과정에 대해(2022.11.29.)

지금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의 공통된 사항 중 하나가 대변인실에서는 적절한 사람을 판단했고 그래서 적절하게 앞으로도 홍보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말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세종시에 더 훌륭한 홍보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치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고민하고 걱정했던 부분이 “선택지 없이 찬반으로 시민들에게 의견을 수렴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찬반이 아닌 선택지 두 개를 두고 택할 수 있게끔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해 달라. 그 결과값으로 조례 제정을 논하자”라고 해서 일단 보류를 했었던 말이에요. 이 또한 지금 저희 홍보대사랑 똑같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같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결과치가 나오는, 사실 소통이 아닌 불통의 방향성이라고 자꾸 인지가 돼요.

유인호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세종시 마을기록문화관 운영 방향에 대해(2022.11.29.)

마을기록문화관을 방문하는 방문층이 체험의 형태나 관광의 형태의 요소적인 성격들이 같이 버무려서 가면 물론 금상첨화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거 이외에 기록물의 보관소라는 측면인 거고 거기로 찾아오는 것은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 기록보관소 자체가, 이 마을기록문화관이 전국에 유일하게 있는 곳이다 보니 주민자치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나름의 거쳐 가야 할, 가치를 경험해 봐야 할, 한 번 정도는 참가해 봐야 할 이런 목적을 가진 목적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도 건물 내부적인 이런 모습들도 조금은 틀이 갖추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것과 더불어서 운영상의 문제들도 병행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윤지성 의원

민간·가정 어린이집 장비 및 지원에 대해(2022.12.07.)

수용 인원을 가지고 점수화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마다 수용 인원을 채울 수 없는 지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정 어린이집이니까 수용 인원이 많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20명 수용 인원이다 하면 10명 미만 수용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인원이 적다고 해서 이런 소모품 장비 및 지원을 등급에 맞출 수 없게끔 해 놓으면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이들하고 청소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지도 않은 돈을, 예산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을 꺼린다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소희 의원 (교육안전위원장)



교육청 학생화해중재원의 담임교사 연수에 대해(22.11.30.)

제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저도 민원이나 다른 케이스로 이런 학폭 얘기를 들어 봤을 때 보통 피해를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학교 대처에 대해서 좀 많이,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학교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야 하나?”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서 거기에서 서운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학교 입장에서 대처하는 매뉴얼이나 이런 방안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또 속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순열 의원 (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 소관 본예산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해(2022.12.2.)

국내외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특히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중에 세종시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 예산 세우실 때 많이 수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사성 예산에 대한 위원님들의 굉장히 깊은 고민이 있었고요. 논쟁도 많이 있었지만 일단 의결된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잘 수행해 주시고, 그리고 아울러 부서 간에 소통이 부재했다는 게 여지없이 드러나는 예산안 과정이었습니다.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부처끼리의 소통에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또 새로운 신규 사업을 제시함에 있어 위원님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료 준비와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현정 의원

안전 업무에 관한 부서 간 협업에 대해(2022.11.30.)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 근로감독관이 파견되게 돼 있는데 중대재해 처벌 매뉴얼에도 이게 있어요. 불시 점검을 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축에 대한, 공공건설에 대한 안전은 사회재난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민간건설에 대한 노동자들의 안전은 일자리정책과에서 담당하게 돼 있고, 다 사분오열돼 있고 부서 간 장벽이 너무 높아서 뭔가 안전에 관한 건 부서 간에 하지 말고 한 군데에 모여서 같이 코워크(co-work)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많이 힘들지요? 앞으로 실·국장님들 회의하실 때나 그럴 때 이런 방향으로 잡아 가시면 어떨까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임채성 의원 (행정복지위원장)

지자체 차원의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2022.12.02.)

예산이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에게 돌아갔을 때는 터무니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0억이 예산 책정됐다. 실제적으로 복지 수혜를 받는 분들은 그만큼 수혜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중간에 막대한 예산이 새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다이렉트로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노인, 아동, 장애인 이분들에게 직접 드리는 게 훨씬 낫다니깐요.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살펴 봐야 할 것 같고 보건의료도 마찬가지로요. 기존에 늘 해 왔다고 관례적으로 해야 되지 않고 요즘 시대에 맞는, 그리고 시대의 이슈들, 상황에 맞게끔 보건의료정책도 펼쳐야 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앞으로는 트렌드에 맞게끔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원석 의원

관내 법인 또는 민간 위탁 활성화 방안에 대해(2022.12.5.)

기존 수탁자는 말이 나올 수 있는데, 그 특혜가 명분이 있잖아요. 세종시청에서 집행하는 사업을 관내 기업에 준다. 우리 관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심지어 다른 데는 제한도 거는데, 고작 가산점이에요. 그거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세종시민 어떤 분이 뭐라고 합니까? 세종시의 세금을 세종시에 쓰겠다는데. 지금 기존대로 하면 우리 세종시민 세금이 서울에 있는 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국장님 포함해서 일부 공무원들밖에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기존 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따지시는 거는 극히 일부분이에요.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NEWS PAPER

[충북일보] 2022.11.07_지역 16면

충북일보

2022년 11월 07일 16면 (지역)

세종시의회 의정모니터링단 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양호'

세종시의회의 의정활동이 의정모니터링단으로부터 양호한 평가를 받았다.

의정모니터링단은 지난 4일 78회 정례회 중 2021회계연도 예산 결산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의정 모니터링 결과 보고를 통해 "전체적으로 자료 분석을 통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송과 질의, 구체적인 사례와 분석을 통한 대안 제시 등 초선의원들이 대다수인데도 시회의 의결재와 감시 기능이 충실했다"고 총평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에게 질의가 편중되는 경향이나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집행부 답변에 대한 일부 의원의 고압적인 어투 등은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정모니터링단이 위촉된 37명은 개인별로 현장 방문 또는 온라인 중계 시청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모니터링 후 개인별 활동 결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세종/김정호기자 (5.4·12.7.cm)

[충청일보] 2022.11.14_지역 13면

忠淸日報

2022년 11월 14일 13면 (지역)

세종시의회, 우수사례 '행안부 장관상'

시민중심 조례 입법평가제 인정 의원실명회 등 역량강화 고평가

세종시의회가 지난 1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2년 지방발전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에 해당하는 우수상을 수상했다.

세종시의회는 세종시 출범 이후 최초로 실시한 '시민 중심의 조례 입법평가제'의 도입 배경과 추진 경과 등 우수 성과를 인정받아 지난해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이어 2년 연속 결선에 진출했다.

특히 올해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의정활동 중 주민 추천을 받은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자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 진출한 8건에 대한 현장 발표를 통해 최종 순위를 결정했다.

지방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된 '조례 입법평가제'는 시장·교육청 조례까지도 평가 대상을 확대하고, 한국법제연구원과 시민사회단체, 법률·입법 전문가 등 다 양하게 조례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평가에 내실을 기했다.

여기에 입법평가 결과에 대한 의원실명 회를 열어 의원들의 자치입법에 대한 관심 제고와 역량 강화의 계기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경연장에서 세종시의회의 우수사



세종시의회 김하서 제2부위원장(오른쪽)과 우수사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의정활동

례를 발표한 대전세종연구원 최성은 입법평가위원은 "조례 입법평가위원으로서 직접 우수 성과를 소개하는 발표까지 맡아 영광이었다"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 중심의 입법평가로 자체 입법 역량을 강화한 4대 세종시의회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펼쳐나갈지 몹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행된 의정은 "지자체 우수상이 이어 올레도 또다시 큰 영광을 안게 돼 매우 기쁘다"며 "세종시 의회에 관심과 응원을 보내주시는 주민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도 주민 권익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성열기자 (11.4·15.9.cm)

[대전일보] 2022.11.14_정치 04면

大田日報

2022년 11월 14일 04면 (정치)

"지방·행정법원 세종 설치 시급"

시의회 결의안 채택

세종시의회는 김한미 의원의 대표 발의로 '세종시 지방법원·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세종시 설치를 촉구했다. 13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제79회 정례회 1차 본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대법원, 국무조정실 등에 보냈다.

시의회는 "세종시는 출범 10년 만에 인구 40만명을 앞두고 있고 올해 10월 기준 23개 중앙행정기관 및 25

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다"면서 "도시규모의 지속적인 확대와 인구급증으로 사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세종시에는 아직도 대전지방법원 관할 시군법원만 설치돼 있다"고 결의안 채택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세종시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을 위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시급하다"며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통해 세종시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태훈 기자 (11.0·8.5.cm)



[동양일보] 2022.12.16_종합 05면

동양일보

2022년 12월 16일 05면 (종합)

전동킴보드 이용자 안전의식 강화 절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 토론회… 안전 인프라 구축 중요

전동킴보드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강화와 자전거도로 관리 등 안전인프라 구축이 인명사고를 줄이는 필수 대책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학생들이 방과후에 불법으로 이용하는 민원이 늘면서 교육당국의 안전교육과 경찰의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15일 오후 3시 의회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안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현욱 교육안전위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았고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활성화 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토론회에 나선 세종시의회 교안위 김호숙 위원은 "경화된 속도제한, 운전자격검증, 가경에의 안전교육 등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에서만 할 수 없다. 유럽처럼 미리 맞대서 지체 없이 개선노력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윤희 세종시교육청 정책기획과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조례 마련

△인정 후 이용하는 시스템 개선 필요 △학생, 학부모 인식 개선을 위한 안전교육 실시 등을 개선 방안으로 내놨다.

이와 관련 백준상 세종시 교통과장 "전동킴보드가 공유사업자 방식이고 이용을 더 많이 하게 해야 하는데 안전과 관련 제한이 많으면 전동킴보드 이용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교통수단을 받아들이면서 안전확보 고민은 어렵다"고 토론했다.

그러면서 "읍면지역까지 자전거도로 확충하고 도로관리를 강화해야 하지만 조례를 통해서 안전확보를 할 수 있는 효과는 없어 보인다"며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는 지켜야 할 것들을 잘 지킬 수 있는 캠페인과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는 것이 세종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종시, 세종시교육청, 세종남부서 등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모두 33건이다.

올해 7월 31일 현재 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2020년 5건, 2021년 11건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세종 신서희 기자 zsv2504@dnnews.co.kr (12.4·14.6.cm)

[충북일보] 2023.01.02_지역 16면

충북일보

2023년 01월 02일 16면 (지역)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로 거듭

시의회, 집행부와 공조 강화

월 1회 양 기관 방문 약속

U대회 향후 준비 지원 계획

세종시의회는 올해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의정 활동과 성과 수준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도록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해 나가면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세종시의회는 거대한 양 집행기관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의회의 모습을 제시하는 한편 다양한 시도를 통해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의회상', '시민 스스로 공감하는 의회상'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아울러 집행부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월 1회 양 기관 방문을 통해 주요 시정교 교육 현안을 발굴하고, 특히 충청권이 사상 최초로 2027년 하계 세계태권경기대회를 공동 유치한 만큼 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재정 확보 방안 마련 등 향후 준비 과

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시의회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추진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상가 허용 용도 규제 완화 조치 등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분석하면서 대안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시의회는 상가 허용 용도 완화가 실제 상가 공급량을 낮췄는지 정적으로 조사하고, 허용 완화된 업종이 상권을 구성하게 됨으로써 얻는 효과도 측정해 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에야만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추 가 규제 완화 필요한 부분을 찾고 시의회 측에 문화예술 활동, 주요 상권 상인회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 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 의하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실현 가능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의정 지원 방안과 의정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시의회는 세종시가 순차적으로 행정수도 완성이 필요한 도시 기능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 동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및 대법원 세종지법 건립을 위한 국가적인 지원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상행된 의정은 "세종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평이 수도권 중심에서 충청권 주도의 균형발전으로 지각 변동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는 2030년 도시 완성 단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으로 추 가 규제 완화 필요한 부분을 찾고 시의회 측에 문화예술 활동, 주요 상권 상인회 등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시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 역 량 강화를 위해 의원들이 삶의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만나 지역 현안을 논 의하고 깊이 있는 시각으로 실현 가능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 의정 지원 방안과 의정 역량 강화 교육

세종/김정호기자

kimieconh@naver.com

(16.4·14.1.cm)

[중부매일] 2022.12.07_정치 02면

중부매일

“국비확보 총력”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개최 합심

세종시·시의회, 대평동체육시설 조성 등 협력체계 구축

세종시와 시의회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맞손을 잡고 대평동종합체육시설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세종시에 따르면 최민호 세종시장과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은 전날 시장 집무실에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논의를 갖고 시·최 현안 사업인 대평동종합체육시설 조성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번 만남은 양 기관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상호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시장과 상 의장은 이날 만남을 통해 대회 개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정부부처 설득과 국비확보에 조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상 의장은 “시의원 전원은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집행부와 끊임없는 소통을 갖고 자질없이 현안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시는 대회 준비를 위해 의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의회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최 시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대평동종합체육시설 예산확보를 위해 지난년부터 이달초까지 국회에서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국외 차원의 지원을 부탁하며 대회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

최 시장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대평동종합체육시설을 최선식 시설로 조성하고 우리시의 재정부담 최소화를 위해 예산확보와 행정절차 이행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다가오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최민호(왼쪽) 시장과 상병헌 의장이 논의를 하고 있다.

2022년 12월 07일
02면 (정치)

[충청투데이] 2023.01.10_정치 05면

충청투데이

민선 8기 충청권 광역의회 임기 첫 해 마무리

지역별 의정 활동 적극성 차이

의원 1인당 대전 1.4건·세종 2건·충북 1.48건·충남 0.89건 조례안 발의의 5분 발언 횟수 차이 확인-세종 평균 1.7회 최다-대전 0.72회 최소 의장 이외 일부 사도 의원은 조례안 발의·5분 발언 모두 하지 않아 지역 평가 “초선 의원 비율 높아 성과 나타내려면 시간 걸릴 수도 있어”

여기에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한 지표가 될 수 있는 본회의 중 5분 자유발언 횟수도 차이가 있었다.

민선 8기 충청권 광역의회가 임기 첫 해를 마무리 지은 가운데 의정활동의 적극성에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자치법규 제정 혹은 정비를 위한 조례안 발의는 물론 각종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5분 자유발언 빈도 등 격차가 뚜렷한 상황.

9일 충청권 4개 시도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연말까지 처리된 의원 중 대전시의회의 의원들은 총 31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같은 기간 세종시의원들은 40건, 충북도의원들은 52건, 충남도의원들은 43건의 조례안을 각각 발의했다.

발의된 조례안 수만 놓고 보면 충청도의회가 가장 많고 충남도의회의 세종시의회, 대전시의회가 뒤를 잇고 있다.

의정활동의 활발한 발의는 세종시 의원의 0.7건, 충북도의회 대전시의회의 0.5건, 충남도의회 0.4건 등이다.

하지만 의원 1인당 평균 조례안 발의 수로 환산할 경우 순위는 달라진다.

세종시의원은 지난해 평균 2건의 조례안을 발의한 반면 충청권 광역의회 중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총 20명의 세종시의원들은 34회의 5분 발언을 진행, 평균 1.7회를 기록했으며 충북도의원 35명은 평균 1.02회 수준인 총 36회의 5분 발언을 실시했다.

충남도의회의 평균 5분 발언 횟수는 0.95회(현재 48명, 46건), 대전시의회는 0.72회(현재 22명, 16회) 수준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의장 이외에 일부 사도 의원의 경우에는 지난해 조례안 발의가 없는 것은 물론 5분 자유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초선 의원들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다 보니 의정활동 성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며 “하지만 이제 임기 2년을 맞은 만큼 지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 기자 stouche@kbcnews.com
(17.1.18.20cm)

[충청신문] 2023.01.10_종합 01면

충청신문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9일 충남도의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각종 지역현안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왼쪽부터 상병헌 세종시의회의장, 이상례 대전시의회의장, 조길연 충남도의회장, 황영호 충북도의회장.

충청권 시도의회, U대회·메가시티 성공 추진 힘 모은다

예산 확보·규약 재정 등 조광역적 협력 한목소리

충청권 4개 시도의회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 등 지역 현안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충남도의회는 9일 국제회경장에서 ‘충청권 4개 시도의회 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11월 개최가 확정된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한 협력과 지원을 다짐했다. 간담회에는 충남도의회 이상례 의장, 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충북도의회 황영호 의장이 참석했다.

타지역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대규모 국제종합경기대회가 수차례 열렸

던 것과 달리 그동안 충남은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소외돼왔다.

이에 따라 4개 시도의회 의장단은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개최함으로써 충청권의 위상을 높이고, 메가시티 및 행정수도 완성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충청권 의장들은 대회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시설 구

축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4개 시도의회는 또한 충청권 특별자치방자치단체(메가시티)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충청권 조광역적 협력 필요성 증대에 따라 충청권 4개 시도는 2020년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을 채택한 데 이어,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충청권 특별자치제 합동추진단’ 헌시기구 신설을 승인했다.

합동추진단은 정부 및 시·도간 협의와 규약 제정, 시·도민 홍보, 광역행정 사무 발굴 등 충청권 특별자치방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공동 컨트롤러 역할 을 하게 된다. 앞으로 시도의회 의장들은 특별자치방자치단체 설치 협약 체결을 통한 추진 의지 표명 등 합동추진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조길연 의장은 “지난해 4개 시도가

합신하여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이뤘고,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의 모토도 마련되었다. 올해는 이 과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기구가 출범하고, 핵심적인 기본 계획들이 수립될 것”이라며 “시도의회가 초당적, 초광역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 50만 운영의 역량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이영희 기자 euhe22@dnyn.net
(31.1.18.20cm)



세종시의회,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 우수 소감문 시상

본회의장서 공모전 시상식 개최 우수작 7명에게 상장 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상병헌)는 12월 28일 본회의장에서 '2022년 청소년 의회교실 소감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우수작으로 뽑힌 7명에게 상장을 수여했다.

세종시의회는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2017년부터 청소년 의회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전 과정을 대면으로 진행했다.

올해 의회교실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 422명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공모한 결과 ▲최우수상 한규리(세종대성고2), 이윤찬(으뜸초4) ▲우수상 박서희(해밀초6), 박소이(미르초4) ▲장려상 성효린(해밀초6), 박하령(미르초4), 김송연(으뜸초4) 등 총

7명의 학생이 심사를 거쳐 선정됐다.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규리 학생은 “청소년 의회교실에 직접 참여해보니 의회라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면서 “청소년 의회교실에 대한 경험을 잊지 않고 훗날 저도 사회에 꼭 도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상병헌 의장은 수상한 학생들을 축하하며,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활동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면서 “내년에도 더 많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의회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우수

청소년 의회교실 본회의 방청 소감

한규리(세종대성고등학교)

세종시의 주인으로서 주민을 대표하여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하는 의회라는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를 확인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 의회교실이라는 기회를 빌려 본회의를 방청할 수 있어 너무 좋았는데 의회에 계신 위원장님과 공무원분들이 반겨주시기까지 하시어 정말 편히 의회를 둘러볼 수 있었던 것 같다. 본회의의 전 위원장님을 만나 쉽고 간단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 과거, 현재, 추가 예산 자료집들로 가득한 위원장님의 공간은 세종시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다.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주시겠다고 명함도 한 장씩 나누어주셨는데 처음 받는 명함이라서이기도 했지만, 점자 명함이라는 점이 마음 깊이 남았던 것 같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까지 고려하는 섬세한 배려가 시민을 생각하는 의회의 마음을 느낄 수 있게 했기 때문이다. 본회의에서는 역시나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원님들의 생각을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자유발언은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기록은 역사다라는 글귀를 통한 기록물 보관의 중요성과 보관시설의 확대 필요에 대한 제언이었다. 현재 보관 시설의 90%가 이미 기록물들로 채워진 만큼 일정부분을 폐기한다 하더라도 후에 저장공간이 부족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셨는데 역사 기록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기록물 보관 시설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두 번째 자유발언에서는 농업진흥지역 해체에 대한 제언이었다. 농업 진흥지역을 처음 알게 된 나에게는 매우 어려운 주제였지만 도로, 철도 개설과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떨어진 농업진흥지역의 개선에 대한 고민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생각 되었다.

세 번째 자유발언에서는 가정 내 폐의약품 수거 방식 개선에 대한 제언이었다. 생각해보니 의약품 폐기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 방법도 모를뿐더러 고민해 본 경험조차 없는 것 같았다. 코로나 시기인 현재와 앞으로를 생각해 보았을 때 폐의약품 수거의 문제는 점점 중요해 질 텐데 오늘을 계기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 봐야 할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네 번째 자유 발언에서는 이번 이태원 참사를 기점으로 이전의 상품 백화점 붕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인재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시며 주체자가 없는 행사에도 관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셨다. 세종시의 경우 중앙공원과 호수공원의 안전관리를 특히 강조하셨는데 다시는 과거와 같은 큰 인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세종 시민으로서 지자체가 시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이다.

마지막 자유발언에서는 애민정신의 마음을 본받아 세종 문화원 문화활동 확대 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셨는데 이 제언이 통과 된다면 행복도시 세종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가진다.

끝으로 이렇게 가까이 의원님들을 본것이 처음이었는데 다들 정말 훌륭하시고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회의를 구성하는 입법담당관 분들, 속기사 분들, 카메라맨 분들의 모든 노고가 우리 사회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구나 생각하게 되었다. 훗날 나 역시 사회의 꼭 도움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을 기억하고 싶다.

최우수

‘큰 교훈의 시의회’ 다녀온 후의 나의 생각

이윤찬(으뜸초등학교)

그날은 설렘이 가득했다. 바로 시의회로 체험학습을 가는 날 이었다.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체험학습에 간다는 소식 때문에 설렘에 빠진 것이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오고 우리는 보내주신 버스에 탑승해 아주 크고 멋진 곳에 도착했다. 우선 도착했을 때 시의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었고 드디어 기다리던 나의 발표 시간이 다가왔다. 발표의 내용은 세종시에게 바라는 점을 말하는 것이었다. 사회시간에 우리 세종시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조사하였는데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줄 수 있는 곳에서 나의 발표를 하니 긴장되기도 했지만 너무 뿌듯하였다.

발표를 잘 마친이후 지방선거, 비밀투표 등 많은 것들을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배우게 되었다. 이제 다시 학교로 갈 시간이 다가왔다. 버스에 탑승하자 긴장감도 풀리고 갑자기 감동이 밀려왔다. 시의회 분들은 그런 힘든 일을 우리 세종시를 위해 열심히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세종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해주셔서 감동적이었다. 하지만 순간 슬픈 생각도 들었다. 시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는 노력을 하지 않고 받기만 하고 있을까? 우리 으뜸초등학교, 더 나아가 고운동, 세종시민이 모두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해본다.

시의회분들께 감사의 뜻으로 이 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교훈과 도움의 중심 시의회

이윤찬

‘이날보다 큰 교훈을 얻은 날은 없었다’

시의회는 여러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돕고

무엇보다 큰 교훈을 주는 곳이다.

시의회는 이처럼 나라에 도움을 주는 기관이다.

그리고 세종시에서 훌륭한 기관중 하나이다.

이렇게 훌륭한 시의회를 견학하고 큰 교훈을 얻었다.

‘나 자신이 아닌 우리 모두가 공존해야 세종시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마친 후



박서희(해밀초등학교)

나는 오늘 학교에서 의회에 대해 알게 되었다. 찾아가는 청소년 의회교실을 통해 해밀동 주민들을 대표하고 관리하시는 윤지성 의원님도 실제로 만나게 되었다.

세종특별자치시에 사는 나도 잘 모르는 사실들을 알게 된 시간이었다.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에서는 세종을 위해 많은 일을 한다고 했다. 의회 말고도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도 세종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들었다. 의회 안에는 4개의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다.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가 세종에 사는 시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놀라웠고 감동을 받았다.

의회에 대해 알게 되고 해밀동을 대표하시는 시의원인 윤지성 의원님을 만났다. 윤지성 의원님에 대해 궁금한 점을 물어보았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질문은 '왜 시의원을 하게 되었나요?' 이다. 윤지성 의원님은 '자신이 그 자리에서 주민들, 시민들을 위해 일을 하고 싶어서'라고 하셨었다. 나는 이 대답을 듣고 윤지성 의원님에 대한 믿음이 더 커졌다. 왜냐하면 윤지성 의원님께서 하신 말들이 모두 진심에 물어났기 때문이다. 윤지성 의원님과 해밀동이 잘 지내서 해밀동이 더 눈에 띄고 예쁜 마을이 되면 좋겠다.

윤지성 의원님과 만남이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나온 선생님과 수업을 진행했다. 이 때는 민주적·비민주적인 단어들인 쓰인 젠가를 통해 수업을 들었다. 젠가에는 여러 민주적인 단어들인 단과 비민주적인 단어들인 불어 있었다. 협력, 배려와 존중, 뇌물, 지역주의, 공약 등 다양한 단어들 보고 알게 되었다. 이 단어들 중 처음 보는 단어는 '지역주의'라는 단어였다.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도 잘 알지 못했다. 지역주의에 대해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는데, 지역주의는 자신의 지역에 손해를 보는 일은 하지 않고 득이 되는 일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되지 않았지만 쓰레기 소각장으로 인한 지역간의 대립 같은 예시를 들어주셔서 이해하기 쉬웠다. 지역주의는 비민주적인 단어였는데, 세종시가 지역주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생각이 실제로 이루어지려면 세종시의회, 시청 등과 시의원 분들이 시민들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오늘 들은 내용들은 잊지 않고 앞으로도 유용한 곳에 잘 사용하길 바란다. 내가 세종에 산 6년 동안 많은 것이 생기고 변했지만, 아직 고치거나 더 개발한 것들이 많다. 시의원들과 시청, 의회가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모두 다 같이 노력하자.



숨겨져 있는 세종의 기둥

박소이(미르초등학교)

2022년 10월 25일, 오늘을 난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내가 사는 곳,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세종시의 의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발을 디어보고 그 두 장소가 맡은 일을 알아보았으며 의장님과 안신일 위원장님을 봤기 때문이다. 정작 그 시간 속에선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소감문을 적다 보니 '내가 다시 그분들을 뵈 수 있을까'라는 아쉬움의 향기가 풍기는 생각이 든다. 세종을 받쳐주는 조례(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 의회의 의결을 거쳐 그 지방의 사무에 관하여 제정하는 법)를 정하고 더 좋은 모습의 세종을 향한 의견을 내뿜는 회의도 하는 곳이 바로 세종시의회인데...

왜 나는 몰랐을까? 의회는 이것 말고도 시청의 업무상황을 견제하고 확인하며, 한편으로는 시청을 응원하는 일도 한다. 이전 의회의 걸, 즉 의회라는 이름만이 아닌 속, 다시말해 의회의 업무와 모습을 알게되어 매우 기쁘고 자랑스럽다. 또 직접 본회의실 단상에 서서 내가 원래부터 희망하고 소망하던 의견을 말한다는 것에 벽참을 느꼈다. 떨리면서도 들떠있던 내 마음으로, 목소리로 부족하게 발표함에도 불구하고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선 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따른 체험 등 선거의 역사를 증명하는 포스터, 사진 등을 구경했다. 선거는 18세부터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할 수 없지만, 오늘로 인해 나중에 더 공정하고 의미 있는 선거를 치를 수 있을거라 믿는다.

정치는 항상 돌고 있다. 바퀴처럼, 그리고 그 바퀴는 세종에서도 돌고 있다. 난 완전 편하게 그 바퀴 위에 자동차 안에서 세상을 비난하기도 하고 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나랏일에 생각 없이 불평이 던졌다. 하지만 던지면 뭐해 그 불평은 내 자리의 범위를 뚫고 가지 못하는데...

나도 앞으로 오늘 본 세종의 단단한 기둥의 한 부분이 되어 나의 도시, 나의 세종에 내 의견과 도움을 보태며 과거보다 미래가 더 좋은 세종을 향한 게 끝없으리라 믿는 바퀴를 세종시민들과 함께 돌리고 싶다. 이 소감문이 의회에서 일하시는 분들께 가서 그분들께 감사드리는 마음, 내 다짐, 느낀 점을 전해드리면 좋겠다.



장려

평 먹고 알을 먹을 수 있었던 수업

성효린(해밀초등학교)

우리 반은 의회교실에서 시의원분과의 수업,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 총 2가지를 듣게 되었다. 2~3교시 때는 시의원분께 질문을 하고 답변도 듣고 홍보 영상도 보았다. 시의원분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주셨고 일하시는 곳은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있었다. 1학기 때 사회책에서 설명이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서 노트 정리나 설명을 들을 때 힘들었는데, 시의원분께서 직접 와주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궁금증을 해소해주셔서 감사한 점도 있었다. 솔직히 의회교실 때문에 질문을 내야 한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땐 “굳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수업을 들었을 땐 시간도 후딱 가고 사회수업 때 더 도움이 되었다. 나는 과목 중 사회를 2번째로 싫어하는데 이 의회교실을 할 때는 지루하지도 않았고 졸리지도 않았다.

2번째 수업은 민주주의에 대한 수업이었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조금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민주주의는 서로가 그냥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젠가”라는 게임을 통해 깨달았다. 젠가는 내가 빨 블록을 빼고는 건들지 않고 빼는 게임이지만 가끔가다 어떤 친구들은 쓰러질까봐 잡고 뺀다. 선생님께서 이와 비슷한 예시를 들어주셨다. 나는 그때 만약 잡고 빼낸 블록이라면 불공평하다,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해야 공정하다고 발표했는데 그때 알게 되었다. 민주주의는 서로 간의 양보와 배려가 50%를 차지하면 공정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능력이 50%를 가진다는 점을 알았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주의”라는 말을 들으면 양보, 배려, 공정과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줄 것 같다. 다른 친구나 동생에게 이 두 가지의 수업을 통해 알게된 점과 배운점은 무수히 많았고 나의 사회공부와 도덕에 영향을 크게 미친 것 같다. 만약 중학교에서도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면 또 하고 싶을 것 같다. 시의원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을을 봐주시고 일을 하실 때 힘든점이 많다고 하시는데 우리 마을을 좀 아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민주주의 수업을 들었을 때는 나의 아주 작은 행동도 비민주적인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두 수업을 들은 나는 평 먹고 알을 먹을 수 있는 셈이 된 느낌이었다. 의회교실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장려

세종시 의회체험

박하령(미르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박하령이라고 해요. 저는 2022년 청소년의회교실을 방문하여 소감문을 쓰고 있어요. 이번주 월요일(10.31.)에 의회를 갔다왔습니다. 사실 버스에서 내릴 땐 '뭐, 재미있겠지. 그냥 하자'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발표하며 체험하니 생각했던 것보다 재미있어서 놀랐어요. 실제로 발표하는 것이 떨렸었지만 '의회, 어쩌면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몰라!'라는 생각으로 끝내 발표를 했어요.

다시 대본을 읽으며 우리에게 편하게 느껴지는 세종시도 앞으로 고칠 점이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앞으로 행복한 세종시를 위해 많이, 열심히 일하는 의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런 재미있는 경험을 많은 친구들이 체험해 봤으면 좋겠고 그만큼 좋은 추억을 쌓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한 세종시를 위해 불편한 점은 건의하고 그 문제가 고쳐져 모두가 불만없게 만드는 것은 '우리'의 시작이에요. 세종시민이 먼저 건의하면 그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면 좋겠어요.

의회체험을 하며 느낀 점과 우리가 노력해야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사회에 너무 무관심하게 행동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귀 기울여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있더라 닐어요! 어쩌면 월요일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회를 간 거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장려

시의회는 어떤 곳일까?

김송연(으뜸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전 시의회 현장체험 학습을 다녀왔다가 소감문을 작성하고 있는 김송연이라고 합니다. 우선 시의회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의회에서 아주 멋지고 큰 차를 보내주셔서 설레는 마음으로 버스에 탔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버스를 타고 체험학습을 가는 것이 거의 2년 만이라 조금 멀미도 나더군요. 그런데 막상 시의회라고 써진 큰 건물 앞에 다가갈 때 그 멀미감은 사라지고 엄청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들어가니 문제를 맞히고 메시지를 입력할 수 있는 기계가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문제도 풀고 메시지도 입력하며 재미있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시의회 3층의 표결장소에서 발표하는 것이었습니다. 발표하기로 다짐하고 원고를 작성할 때는 떨리지 않았는데 막상 발표할 때는 많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용기 있게 나서서 발표를 잘 마치고 나니 실수는 많이 하였지만 제 마음이 많이 부들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조금 부족하고 아쉬운 점을 이야기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할 일을 이야기하며 친구들도 동의해주는 모습이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리고 발표를 잘 마치고 상장을 받는데 무언가 대표가 된 것 같아 사명감도 생기고 기분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시간에 의회장 단상에서 망치를 쳐보는 것도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독특한 체험으로 많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사회시간에 배운 내용을 토대로 시의회에 방문하고 직접 우리 세종시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을 뵈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소에 시의회와 우리 세종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멋진 세종 시민으로 자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의회 2023년 상반기 회기 일정 안내

1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80회 임시회 : 1.30. ~ 2.10.(12일)
 -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청취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설 연휴 : 1.21.~24.

2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3월 (임시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81회 임시회 : 3.10. ~ 3.27.(18일)
 - 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답변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삼일절 : 3.1.

4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₃₀	24	25	26	27	28	29

- ※결산감사 : 4.12. ~ 5.1.(예정)

■ 본회의 예정일 ■ 상임위 예정일
 ※ 기본일정은 의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제82회 제1차 정례회 : 5.22. ~ 6.27.(37일)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 202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청취
 -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의

6월 (정례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 어린이날 : 5.5.
 ※ 석가탄신일 : 5.27. / 5.29.(대체휴무)
 ※ 현충일 : 6.6.

세종시의회 운영 미디어 채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시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홈페이지
<https://council.sejong.go.kr/>

홈페이지와 페이스북을 통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가 생중계되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는 각종 홍보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councilsejong>

많은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세종특별자치시의회>

독자 투고 안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소식지 <세종의회소식>에서는 시민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이웃과 함께 나누고 싶은 따뜻한 이야기나 감동적인 사연, 시의회 방청 및 방문을 통해 느낀 점, <세종의회 소식>이 진열된 사진과 함께 소식지를 읽은 소감, 의회에 바라는 글 등을 보내주시면 소중히 하겠습니다.

- ※ 증명사진 및 관련 사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보내주세요.
- ※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10내 내외

보내실 곳

우 편 | (우)30151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세종특별자치시 의회사무처 2층 의정담당관 소식지 담당자 앞
전 화 | 044.300.7248 팩스 044.300.7219
이메일 | havnpark@korea.kr

소식지 구독 신청 받습니다!

세종시민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소식지 구독 신청을 받습니다. 세종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책자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청 방법 | 메일(havnpark@korea.kr) 또는 전화(044-300-7248)
*메일 신청 시 성함과 주소,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QR코드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인터넷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방송보러가기 counciltv.sejong.go.kr



◆입법정보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사무처(홍보기획담당)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20
전화 044-300-7000
홈페이지 <http://council.sejong.go.kr>



세종 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